

경제 위기 고통전가

복지 포기과 유리지갑 털기

5 면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을
전진시킬 때

11, 16 면

노동자 투쟁

현대차 파업
정당하다

7 면

세계경제 위기

신흥국과
중국의 불안정

10 면

동아시아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동맹

11 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민식
인쇄인_ (주)아아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6499-279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제110호 | 2013년 8월 26일 ~ 9월 8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프트21



전월세 대란 방치, 공공요금 인상, 노동자 털어 재벌 돕기...

벌써 정당성
바닥나는 박근혜,
곳곳에서 진격하자

▶ 관련 기사 2, 3, 4 면

▶ 관련 기사 8 ~ 9면

이집트 군부의 반혁명을 막아야 한다

리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누구의 말일까요?

“겨우 수백 명이 죽었을 뿐이다.”
군부의 학살을 옹호하는
이집트 총리 하jem 엘 베블라위

“구속영장 없이도 병원 간 거 보니
진짜 아픈가 보네.”
삼성 이견희가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에
한 네티즌

“개구리는 ‘혐오 이물’이 아니므로
제품 회수 여부에 대해 더 논의해 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분유에서 개구리가 나왔는데?

“종북 얘기할 때 반론하는 분은 종
북세력과 가까운 분이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 이장우

“역대 최악의 뺑뺑함을 새누리당이
보여 주고 있고, 민주당은 역대 야당
중 최악의 무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

“멸종의 횃불”, “월남에서 돌아온 김
상사”
보수 단체들이 촛불 집회 옆에서
들어대는 노래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바꾸면 어
뭇겠냐? 생각이 달라지지 않나?”
박근혜, 너나 시간제로 일해라

“사익(私益) 추구가 없었고 기업 정
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검찰이 웅진그룹 회장 윤석금을 불구속하며,
공익을 위한 수천억 원 배임?

“그의 이력은 한 가지 의문을 남긴
다. 그의 생업은 ‘노동’인가 아니면 ‘투
쟁’인가.”
3백 일 철담농성한 최병승 씨를 비난하는
(데일리안)

“우리 당 의원들이 막말하는 거 봤
습니까?”
새누리당 이장우, 못 본 사람 있습니까?

“요금 인상보다는 요금 합리화라는
측면으로 해석해 달라.”
전기 요금 올리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박근혜가 만날 이름만 바꿨지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우천 시 공개판매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일정은 left21.com에 공지합니다.

격주 월요일 (다음 가판은 9월 9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출구 19:00~20:0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나편(오아시스 빌딩앞)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건너편 14:30~15:30

격주 화요일 (다음 가판은 9월 10일)

서울 강남역 11번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출구 19:00~20:00
수원역 롯데리아 앞 광장 19:00~20: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출구 19:00~20:00

격주 수요일 (다음 가판은 9월 11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격주 목요일 (다음 가판은 9월 12일)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스낵서 옆 19:00~20:00

대학 공개판매 (9월 10~11일)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1층 입구 앞 화 12:30~13:30
고려대(안암) 정경대 후문 화 16:30~17:30
국민대(북악) 법학관 1층 식당 앞 화 12:00~13:00
충남대 공대2호관 앞(쪽문) 수 11:45~12:45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절(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 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응암동)
울산 : 동방서림(현대차공장 앞)

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최근 전월세 값이 크게 오르면서 평범
한 사람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50주 연
속 오르고 있다. 2008년 이후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43퍼센
트나 인상돼 집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루아침에 전셋값을 수천만 원씩 올
려 달라고 해서 서울 외곽으로 밀려 나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아예 전셋집을 찾기가 힘든 상
황이다.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깡통주택’도 곳곳에서 세입자
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
은 가뜰이나 서러운, 집 없는 사람들을
더욱 분통터지게 만드는 것이다.

첫째,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
에 집을 사지 않아서 전셋값이 오른다며
“빚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정
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
제 폐지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
며 집값을 떠받치는 것을 주요 대책으로
삼고 있다.

빚 부추기기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저
축한 돈으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7년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



죽여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되는 더러운 세상.

황에서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정부 정책
은 가난한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
멀게 만들 뿐이다.

둘째, 정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라며
전세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
전셋값 인상은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돈
을 빌려 주며 전셋값 인상을 떠받치는 셈
이다.

지금도 가계 부채가 1천조 원이나 되

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빚을 지라고 부추기는 것이
다.

셋째, 최근 정부는 주택시장을 활성화
하겠다고며 공공주택은 오히려 줄이고 있
다. LH 공사는 2016년까지 18만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할 계
획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 공공임대주

택 1백20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
다. 박근혜는 대선 때 55만 호를 공급하
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헌신짝처럼 내
던져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
한제’는 시장의 자유를 해친다며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
이 편안한 집에서 살 권리보다 시장 원
리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 빠
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집부자·투기꾼
들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만 펴고 있
다. 이것이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만 키
우고 있다.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려면 강력한 투
쟁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
꿔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
전한 집에서 살 권리를 우선에 두며 집값
과 전월세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서
세입자들이 돈이 없어서 쫓겨 다녀야 하
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임대차계약기간
도 늘리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최우선 변제권’을 개선해서 평생 모은
전세금 때일 걱정도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주택을 대폭 늘려서 집
없는 사람들이 싼 값에 양질의 주택에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선영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특검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알맹이 없던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 이
제 다시 특별검사 제도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 국정
원, 검찰 등 누구도 믿기 힘들고 공범이
다시피 한 상황에서 특검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새누리
당은 특검조차 수용할 뜻이 없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특검제 도입 이래
열한 차례 특검이 시행됐지만 속시원하
게 권력 비리를 밝혀낸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중의 실망과 냉소만 일으키며
진실을 덮는 또 다른 국면이 되곤 했다.

근래 이명박 BBK 특검, 디도스 특
검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독립적 특검’의 좋은
사례로 언급하는 내국동 특검도 이명
박을 심판대에 세우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특검의 이런 한계는 사실 당연한 것이
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의혹의 몸통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몸
통을 파헤치길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
서 특검제는 미국과 한국 말고는 채택한
나라도 없다. 그나마 미국도 상설특검은
1999년에 폐지한 상태다.

분열

일부에선 위터게이트로 중도 퇴진한
미국 대통령 닉슨의 사례를 들어 특검의
유용성을 말한다. 2년간 이어진 특검 때
문에 닉슨이 사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닉슨을 궁지로 몬 도청 사건 은
폐 공작의 실체는 특검이 밝혀낸 것이 아
니다. 당시 흑인 민권운동, 베트남전 반
대운동 등 대중투쟁 수준이 엄청나게 높
아지며 지배자들이 분열했던 덕이었다.
그 결과 FBI 간부와 백악관 참모 중 일부
가 내부고발자로 나섰었다.

결국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는 특검 같

은 제도에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설사
마지못해 특검을 수용하더라도 몰타기
와 방해 공작을 통해 껍데기로 만들려 할
게 뻔하다. 그러면서 대중의 분노와 관심
이 가라앉길 기다릴 것이다. 국정조사 때
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최근 촛불집회에서 언론노조 KBS본
부장은 “촛불의 힘이 [내부에서 보도 통
제와 싸우도록] 언론인들을 각성시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KBS뉴스는 최근 국정원 도국동
본원에서 댓글 작업이 이뤄졌고, 글 수백

만 건을 조직적으로 퍼뜨린 사실을 연이
어 폭로했다.

이는 국정조사에서 밝힌 게 아니었다.
이런 사례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 준다.

김문성

촛불과 함께한 노동자들의 목소리 1 — 김현석 언론노조 KBS본부장

“촛불의 열기를 받아 언론 노동자도 싸우려 합니다”

국정원 게이트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에서 큰 호응을 얻은 노동자 투쟁 지지 호소 발언을 축약 소개한다.



김현석

이명박 정권 5년은 언론인들에게는 정
말 수치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우리는 언론 탄압을 위한
세력을· 권력자들을 심판해 달라, 해직
된 우리 동료 언론인들 복직시켜 달라며
지난해 언론사 대파업을 벌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처절
하게 깨졌습니다. 언론을 권력자에 넘겨
자리를 차지한 언론사 간부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희희낙락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동료들, 해직
언론인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더는 싸워서 뭐하나,
또 질 텐데, 자괴감과 패배의식에 젖어 싸
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론이 민주주의의 수호자
가 돼야 한다. 적어도 권력의 애완견 개새
끼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준엄
한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불처럼 촛불이 번져 나가기 시작하
자, KBS가 아주 미약하나마 조금씩 변하
고 있습니다. 아니, 눈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촛불집회, 9시 뉴스에 웬
일인지 잘 나갔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정
원 내에서도 댓글을 달았다는 정말 보기
드문 특종도 나갔습니다.

이런 촛불 시민들의 힘이 언론인들
을 또다시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인
2백여 명이 모여 다시 한 번 싸우자는 결
의를 다졌습니다. 들불처럼 타오르는 촛
불시민의 열기를 받아 더 단호하게 싸우
겠습니다.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2차 현대차 희망버스

일시: 8월 31(일토) 오후 5시
장소: 현대차 울산공장
주최: 희망버스 기획단

공약파기 국민 가만 박근혜 정부 규탄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전국 동시다발)

일시: 9월 7일
시간·장소: 미정(추후 공지)
주최: 민주노총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집중 촛불대회

일시: 8월 31일 9월 7일 9월 14일
시간·장소: 미정(추후 공지)
주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촛불과 고통전가 반발이 만날까봐 두려운 박근혜

취임 직후 시작된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는 집권 반년이 지난 지금, 해소되긴커녕 ‘국정원 게이트’ 속에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정원 게이트는 지난 대선 때 강력한 결집을 이뤘던 우파가 박근혜를 당선시키려고 얼마나 무리수를 뒀는지 보여 준다. 또 이것은 박근혜가 ‘유신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결과기도 하다. 관권·부정 선거는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제 마무리된 국정조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김용판, 원세훈과 비호 세력은 국정조사를 ‘진실 압매장 조사로 만들어 버렸다. 저들은 온갖 막말로 국정조사장을 ‘일베 게시판 생중계장’으로 만들었다.

국정조사의 유일한 성과는 권은희 수사과장 같은 정의·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촛불이 더 커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을 가진 자들의 온갖 “거짓말”을 용기 있게 고발했다.

앞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에 저들의 범죄가 생생하게 담겨 있는 동영상 폭로했다. 그리고 오히려 국정조사장 밖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댓글 단 사람들에게 낭비된 혈세, 자동 프로그램으로 수백만 건이나 자동으로 퍼 날라진 댓글 등.

이것은 촛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기 때문에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겹데기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당히 덮고 싶었던 자들의 의도는 먹히지 않고 있다.

특하면 ‘대선 불복하는 거냐’라는 저들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정원의 대통령인가’는 분노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 소유 종편 JTBC가 한 여론조사에서조차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의 수사는 오펜가 있었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세계개악안 발표와 번복이 있었던 지난 2주간에는 껌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10퍼센트나 추락하기도 했다.

근래 박근혜 정권이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촛불에 연료 탱크를 달아줄거냐”(<조선일보>)는 경고 속에서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유리지갑 터는 세계개악안을 ‘원점 재검토’하며 한발 물러섰다.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이른바 ‘원칙’을 훼손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도 합의했다. 북한 지배자들은 박근혜가 정치 위기 속에서 내민 이 손을 잡아 줬다. 철도에서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낙하산 사장을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일단 멈췄다.

불법과 비정상

이처럼 박근혜는 촛불이 다른 문제와 결합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몰타기와 꼬리 자르기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술수를 지속하고 있다. 전두환 뒤지기, 4대강 텅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우파가 뿔뿔 뭉치고 국정원이 밧걸까지 달면서 박근혜를 밀어준 이유는 노동자·민중을 쥐어짜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는 데 있었다. 깊어지는 경제 위기는 이런 방향으로 가속도를 내라는 지배자들의 압력을 더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는 경제민주화 용도 폐기, 복지 확대 포기, 재벌 퍼 주기와 노동자 쥐어짜기를 더 강화하려 한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에게 원내 복귀를 압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온갖 정책을 ‘국민적 합의’로 포장하려면 민주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작은 땀고 물이라도 주면 언제든 국회로 복귀하려는 민주당이 한심하고 믿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조사가 누더기가 된 것을 뻔히 보고서도 말이다.

물론 박근혜는 갈수록 주먹을 앞세우려 할 것이다. ‘유신의 티끌’ 김기춘을 앞장 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정당성이 사라질수록 ‘동의를 설득’보다 ‘강제와 폭력’에 의존하는 법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8월 15일 집권 후 최초로 시위대에게 ‘광복절 기념 물대포’를 쏘고 3백여 명을 연행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의 정당성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8·15 경축사에서



촛불은 박근혜 반년간 쌓인 불만의 분출구가 되고 있다.

박근혜가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나라”를 말했을 때 여기저기서 비웃음이 들리는 듯했다. 국정원 게이트야말로 ‘불법과 비정상’의 종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이런 정당성 위기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성난 민심’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시국회의 내의 NGO 지도자 등은 이런 방향으로 운동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더는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이 운동을 특검 등 제도적 절차에 종속시키며 민주당 꿈무니 쫓기에 머무르도록 통제해서는 안 된다.

촛불은 계속 더 크게 타올라야 한다. 노동운동도 이 과정에 더 조직적이고 능동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 위기 고통전가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며, 민주주의도 노동계급이 앞장서야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가 보여 줬듯이, 촛불 속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행동하자. 무엇보다 박근혜의 정치 위기를 이용해 곳곳에서 투쟁·파업을 일으키며 투쟁 전선을 확대·강화해 나가자.

전지윤

촛불과 함께한 노동자들의 목소리 2

“국정원이 만든 사기 정부에 공무원도 맞서겠습니다”

국정원 게이트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에서 큰 호응을 얻은 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노동자 투쟁 지지 호소 발언을 축약 소개한다.

한국 사회 관료 조직을 바꿔야만, 민주주의가 꽃피 수 있다고 믿습니다. 14만 조합원이 1백만 관료 조직을 바꿔 보자고 2002년부터 12년간 3천 명이 해직되는 아픔 속에 법외노조로 공무원노동조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번째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노동부 과장 전결 사항입니다. [설립신고가] 국무회의에 두 번 올라가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 박근혜는 [노동부장관이] 설립신고를 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도 전국공무원노조의 네 번째 설립신고를 반려쳐본 했습니다.

박근혜가 공무원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 정부는 사



기 정부입니다. 국정원이 나서서 이 정권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시국선언을 진행합니다. 썩어빠진 관료 조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국정원 해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운동 속의 논쟁

시국회의의 주요 세력들에 대한 동지적 쓴소리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그동안 촛불이 커지는 과정에 일정 기여를 했다.

시국회의가 매주 안정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촛불집회는 더 커질 수 있었다. 그리고 철도 민영화 반대 주장, 언론 노동자들의 발언 등도 촛불 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에 힘입어서는 촛불이 계속 커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중이 삶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만과 촛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분명해져야 한다. 따라서 시국회의는 다양한 쟁점을 요구로 채택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끌어내야 한다.

촛불을 키우고 더 급진화시켜서 박근혜에 대한 더 강력한 도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행진이 가능한 주말 낮에 수만 명의 거리 행진을 조직해 참가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높이며 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시국회의의 주요 세력들은

그것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시국회의의 NGO 지도자들은 쟁점 확대가 ‘촛불을 꺼뜨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아래로부터 투쟁 강화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기간 동안 시민의 압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길 뿐 “촛불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있는 건 아니”라고 말한바 있다.

민주당

또한 주요 NGO 지도자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의존과 조직적 연계를 더 강화해 왔다. 그래서 민주당 뒤꿈치공을 쫓으며 촛불을 여기에 종속시키는 듯하다.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요구와 주장들을 통제하려는 것도,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자유를 보낸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반응도 여기서 비롯했을 것이다.

이런 비민주적 태도는 거리 행진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한 인터뷰에서 “폭발성이 있

기 때문에 또 다른 발미끼리가 될 수 있다”며 거리행진을 반대했다. 아래로부터 운동의 활력을 고무하기보다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관점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가 성과없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NGO 지도자들은 특검 요구로 촛불의 방향을 틀려 한다.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국회의의 노동·민중운동 단체 지도자들도 이 방향을 따르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은 공동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의 촛불 집회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계”라며 “대선 불복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고 했다. 박근혜의 압박에 민주당이 ‘대선불복은 절대 아니니 걱정 마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린다.

하지만 운동의 발전 방향을 이처럼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된다. 밝혀지는 진상과 운동의 발전 수준에 따라서 ‘대선 불복’은 얼마든지 필요하고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더 급진적 주장을 하며 아래로부터 투쟁 건설을 강조해 온 통합진보당 등도 비슷한 한계를 보이는 점은 아

쉽다. 쟁점 확대를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을 분명히 비판하지 않고, 특검으로 나아가려는 점에서 그렇다. 최근 <민중의소리> 등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전선적(계급동맹적) 야권 연대를 추구하는 것과 연관있을 것이다. 민주당총 상층 지도자들이 촛불에 조합원들을 동원하고, 촛불과 노동자 요구·투쟁을 결합시키려는 데 미온적인 것도 안타깝다. 노동계급의 주도성은 그럴 때 가능한데 말이다.

대다수 급진좌파들이 운동을 더 급진적으로 발전시키려고 개입하는 게 아니라, 방관하면서 운동의 주도권을 온건 개혁주의자들에게 내맡기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결합

시국회의의 주요 세력이 나타내고 있는 이런 약점은 박근혜의 위기 탈출 시도를 막는 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박근혜는 촛불이 국정원 문제로 한정되고, 제도 정치권에 종속돼서 서서히 힘이 빠지길 기대할 것이다. 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

의 약점을 이용하며 말이다.

사실 이것은 2008년 촛불이 그 커다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기도 하다. 당시 촛불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명박은 임기를 채울 수 있었고, 결국 정권 연장까지 성공한 것 아닌가.

결국 지금 촛불이 보이고 있는 가능성을 더 키우고 실현시키려는 투사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개강한 캠퍼스와 그 주변에서 청년·학생들을 향해 박근혜를 폭로하고 투쟁 동참을 선동해야 한다. 촛불 속에 이런 청년·학생들의 불만과 요구가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도노조, 한대차 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이 촛불에 자체해 자신들의 요구를 알릴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이미 철도노조는 그것이 가능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 줬다.

나아가 박근혜가 정치 위기에 직면한 기회를 이용해 곳곳에서 투쟁·파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총체적 반정부 전선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현실화시키려고 해야 한다.

김문성·전지윤

2008년 촛불항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운동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복지 먹튀, 연이은 부패 비리로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가 쌓여 가던 참에 국정원 게이트는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됐다. 취임 반년도 안 돼 수만 명 규모의 촛불집회가 도심에서 매주 열리게 된 것이다. 우파 정권의 연속 집권에 풀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이런 양상 때문에 지금의 촛불운동은 여러모로 2008년 촛불항쟁(이하 ‘촛불항쟁’)을 떠올리게 한다. 촛불항쟁 역시 당선 직후부터 민영화, 경쟁 교육 등 온갖 반동적 개악을 밀어붙이던 이명박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폭발이었다. 취임 1백일도 되지 않아서 최대 1백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촛불항쟁은 ‘한국 사회 보수화론’에 대한 통쾌한 반박이었다.

방아쇠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의 촛불이 2008년 때처럼 폭발적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 장악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는다.

물론 ‘이명박근혜’가 언론을 장악해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이 계속 가려져 온 것은 사실이다. 주류 언론은 철저히 이 정부를 은폐·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흥기로 쓰이는 언론에 대한 분노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촛불집회가 계속 커져 온 것은 저들의 술수에도 결국 진실이 퍼져 나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 일각에서는 광우병은 접근하기 쉬운 ‘먹을거리’ 문제였지만 국정원 게이트는 민주주의 쟁점이라 거리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은 촛불항쟁의 방아쇠 구실을 했을 뿐이다. 촛불은 반(反)이명박 쟁점을 하나로 모으는



촛불과 노동자 투쟁의 결합 2008년 촛불항쟁의 실종된 고리를 다시 놓쳐선 안 된다. 8월 17일 국정원 정치 공작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전국공무원노조.

구심이 됐다. 그래서 청소년, 비정규직 청년들, 대학생들, 노동자들까지 폭넓게 운동에 참가했고 운동 초기부터 이명박 퇴진과 탄핵 구호가 터져 나왔다.

지금의 촛불운동도 더한층 성장하려면 쟁점 확대를 통해 박근혜에 맞선 다양한 불만이 거리로 나오도록 조작해야 한다. 실제로 철도, 쌍용차, 언론,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의 발언은 촛불집회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운동을 이끌고 있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주요 세력들은 이런 과제에 소극적이다. 이들은 국정조사로 초점을 맞추며 운동의 요구를 제한하려 하기도 했다.

지금은 주요 사회 운동 단체들이 뒤늦게 운동에 참가해서 운동 참가자들의 뒤를 쫓기 급급했던 2008년과는 다르다. 당시 거리를 압도한 것은 대중의 자발성이었다.

잠재력

그러나 연이은 우파 정권의 집권과 2008년 후반 이래 깊어지는 세계경제 위기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냈을 것이다.

촛불항쟁이 온전히 승리하지 못한 경험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

물론, 촛불항쟁은 이명박 정권과 그가 추진하려던 정책들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2008년에도 1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승리하지 못했다’는 물음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온건 개혁주의자들은 ‘거리 시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정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과의 동맹을 통한 의회 정치로 나아갔다. 이들은 지금도 촛불집회를 국정조사의 보조물로 여기며 민주당과의 공조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2008년 촛불항쟁의 진정한 교훈을 이끌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2008년 촛불은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분출하며 아래로부터 자발성과 투지가 만개할 때 놀라운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 줬다.

이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데서 실종된 핵심 고리는 노동자 투쟁이었다. 거리의 촛불 시위와 “국가 골간 산업을 모두 틀어쥐

는 자력 있는 집단”인 조직노동자들의 파업이 결합했다면 그 효과는 엄청났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두 시간 상징적 파업을 조직하는 데 그쳤다.

이런 점에서 철도노조가 적극적으로 국정원 게이트 촛불운동에 참가해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서서히 불붙는 노동자 투쟁이 국정원 게이트 촛불과 결합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릴 것이다.

또한 2008년 촛불항쟁은 대중 투쟁에 함께하고 배우려 하면서도 이런 과제를 일관되게 추구할 혁명적 정치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당시 노동자연대다함께와 같은 좌파는 개혁주의자들이 주춤거릴 때 거리 행진을 이끌며 운동의 질적 도약에 기여했다. 또 쟁점 확대와 이명박 퇴진 요구, 노동자 파업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승리를 위해 촛불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반민주·반노동의 뿌리인 박근혜 정부에 강력하게 맞서려는 사람들은 이 교훈을 지금의 촛불운동에 적용하려고 해야 한다.

김지윤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과 NGO 정치의 문제

2008년 촛불항쟁에서처럼 주요 NGO들은 지금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운동에서도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국면에서 이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구실도 하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 등 주요 NGO 지도자들은, 촛불집회의 요구를 확대해 운동을 더 확대·급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제한하려 한다. 2008년에도 주요 NGO들은 이런 구실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 경향이 한층 강화됐다. 아래로부터 운동을 확대·강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한편에서는 지금의 촛불운동이 아직 그 규모나 급진성에서 2008년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주요 NGO 지도자들의 소심한 태도가 거리의 활력과 급진성에 떠밀려 극복되곤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논쟁을 회피하지 않은 혁명가들의 구실이 중요했다.

다른 한편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주요 NGO 지도자들이 대거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NGO들의 정치적 의존이 한층 커졌다. 김기식, 남윤인순, 이학영, 최민희 등 진보적 NGO의 핵심 리더들과

NGO의 ‘대부’였던 박원순도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전에도 주요 NGO들은 ‘비정부기구’ 또는 정치적 ‘중립’(혹은 독립)이라는 말과 달리 그 지도자들이 민주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국회에서 개혁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정치인들을 만나 설득하고 로비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활동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제도권에서 각종 협의체 등을 통한 정책 제안과 로비가 어려워지자 직접 선거에 뛰어들었다.

후퇴

그러나 민주당을 통해 국회에서 진보적 의제를 성취하겠다는 전략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거꾸로 운동의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이 집권 시절에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친제국주의적 파병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우파 정부하에서도 민주당은 한미FTA나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거들 갈팡질팡하며 운동의 뒤통수를 치곤 했다.

민주당은 그 핵심 인적·재정적 기반을 기업가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 때문에 노동자 투쟁이나 거리의 저항 운동을 일관되게 지지할 수 없다. 일부 개혁적 인사들이 민주당에 들어가도 이 사실

은 달라지지 않았다. 진보 인사들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당을 바꾸기보다는, 그 자신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봐 왔다.

주요 NGO 지도자들은 바로 이 점을 보려 하지 않는데 근본적으로 NGO 정치가 안고 있는 한계와 모순 때문이다.

NGO 정치는 단일 쟁점에 집중하는 개혁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다.

“1990년대 초에 시민운동이 부상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는데, 하나는 1987년 대중투쟁의 결과 권위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불안하게나마 전환이 시작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옛 소련 블록의 붕괴였다. … 동구권 붕괴에 따른 환멸감, 국내 상황 변화에 따른 변혁 전망의 상실의 결합된 배경 속에서 … 활동가들은 1990년대 초반 내내 고민을 거치며 시민운동 진영으로 발길을 옮겼다.” (김하영,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전 세계적으로 많은 NGO 활동가들이 그랬듯이 이들도 체제와의 전면 충돌이라는 사상에서 후퇴해, 환경·여성 등 각종 단일 쟁점 운동으로 돌아섰다. 물론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은 여러 다양한 쟁점을 다루지만 총체적 관점이 아니라 제각각의 해결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다룬다. 이 과정에서 계급적 단결보다 성별·인종·성적 지향 등 정체

성을 강조하는 ‘신사회운동론’이나 국가를 계급 종립적이며 개혁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시민사회론’이 NGO 정치의 뿌리가 됐다.

주요 NGO 지도자들이 민주당의 문제를 그 계급적 기반이 아니라 일부 지도자들의 미숙함이나 의식에서 찾는 것도 이런 사상적 후퇴와 연결돼 있다.

모순

그동안 주요 NGO는 많은 경직된 좌파 조직들이 더는 선동하려 하지 않는 쟁점들을 제기함으로써 지지를 얻어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공식 정치의 우경화 때문에 단일 쟁점 선동을 통한 위로부터 개혁을 이룰 가능성이 줄어들자 모순된 상황에 놓였다.

이 때문에 단일 쟁점 운동을 넘어서야 한다는 제기가 나왔고, 이를 일부 반영해 주요 NGO 지도자들은 정치운동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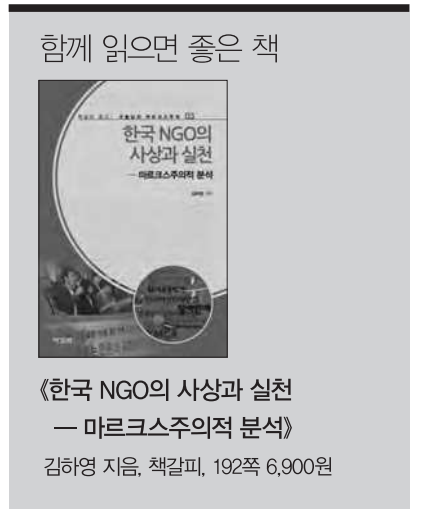
그러나 계급적 관점을 거부하는 개혁주의 정치와, 단일 쟁점 운동을 위해 돈을 모으고 조직해 온 방식 즉, 기성 정당이나 제도권과 맺어 온 관계 때문에 부르주아 정당에서 ‘독립적’인 태도는커녕 오히려 의존이 강화되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그 결과 주요 NGO 지도자들은 투쟁에 참여하고 그것을 이끌기도 하지만, 그런 투쟁이

NGO들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흔히 그 전투성을 억제하기도 한다. 이번에도 주요 NGO들은 촛불운동이 ‘국정원 게이트’라는 단일 쟁점을 넘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일반화된 저항으로 나아가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위한 압력넣기로 촛불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NGO들이 사회운동에서 한 기여에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이들과 함께 운동을 건설하면서도 근본적 변혁과 총체적 세계관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변혁운동 활동가들의 몫이다.

장호중



갈수록 드러나는 박근혜 본색

경제민주화 폐기, 복지 축소, 노동자 쥐어짜기

강동훈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재벌 퍼 주기’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는 얼마 전 “이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 일단락을 선언했다. 재벌의 기득권과 독점을 제한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놓고 말이다.

그리고는 노동자 쥐어짜기와 재벌 퍼 주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근래에 세계개편안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났다.

물론, 반발에 놀란 박근혜가 ‘원점 재검토’를 지시해 근로소득세 증세 기준을 더 높이고 증세 대상 노동자 수를 4백34만 명에서 2백10만 명으로 줄였지만, ‘노동자 증세’라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노동자 유리지갑에서 돈을 훔쳐 가려다가 들키니까, 쥐었던 돈 일부만 도로 집어넣은 격이다.

반대로, 재벌과 1퍼센트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감세 혜택을 늘려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을 보면, “소득·소비 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 과세는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한다는 말은 결국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 세법개정안’은 기존의 일감 몰아 주기 증여세 과세 방안에서 후퇴해 재벌에게 특혜를 줬고, 기업 상속세는 줄여 주기로 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깎아 준 법인세를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빈껍데기

한편, 박근혜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복지 확대도 점차 껍데기만 남고 있다.

예를 들어, 무상보육 공약은 박근혜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아 하반기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사진 제공 (노동자세계)

박근혜는 ‘준비된 거짓말쟁이’였다 8월 19일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와 민영화 추진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지만 ‘복지를 안 하고 말지, 자본가

들 투자 위축시키는 부자 증세는 없다’는데 본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민주당이 막는 탓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신경

질을 낸 바 있다.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은가?” 하며,

계속되는 ‘거위털 뽑기’ — 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요금도 올리겠다?

근로소득세 증세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으려면 소득의 9.5퍼센트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13퍼센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 3백만 원인 노동자는 현재 13만 5천 원인 보험료가 21만 원까지 올라 1년에 9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이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소득에 대한 연금지급액 비율)을 2028년까지 40퍼센트로 낮추기로 해 ‘국민용돈’이 뒤틀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그런데 웬돈 수준이라도 받으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보다 50퍼센트나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과 부자들의 부담을 늘려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3백 98만 원인 국민연금 부과 소득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은 쏙 빠졌다. 이 때문에 수천만 원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자들도 월급 3백98만 원인 노동자와 똑같은 보험료만 내면 될 뿐이다.

다른 한편, 새누리당은 여름과 겨울의 전기요금 폭탄을 없애겠다며 가정용 전

기요금의 누진제를 3~4단계로 줄이는 방안도 내놔다.

전기 사용량을 6단계로 구분해 가장 비싼 6단계는 1단계의 약 11.7배의 요금을 받는 현재의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월에 산업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을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은 요금이 조금 줄지만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정은 오히려 전기요금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결국 여름과 겨울의 전기요금 폭탄을 사계절 요금 폭탄으로 바꾸겠다는 셈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가스 등의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자동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우리 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의 55퍼센트나 차지하는 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보다 40퍼센트나 낮아 기업들은 전기를 평평 쓰고 있다. 게다가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이 지난해 받은 전기요금 할인 혜택만 7천5백52억 원이나 됐다.

진보의 진로 논쟁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가 진보가 해야 할 말인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증세가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도, 자유주의 신문과 진보 진영의 일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자도 증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터터 공동대표는 박근혜의 세계개편안이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조치”였으며, “우리 국민이 소득세 더 낼 테니 ...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도 “솔직하고 당당하게 증세를 제안하라”며 노동자들이 증세를 받아들여야 부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라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기까지 한다. 또 ‘부자 증세 구호를 버리고 복지 증세 구호를 들자’고 말한다.

장하준 교수도 복지는 “국민이 ‘공동구매’하듯 부담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증세를 지지한다.

이에 민주당도 박근혜의 세금개편안을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던 것에서 급세 물러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이 세금폭탄 운운하며 조세 저항을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는 게 정치의 본분”이라고 목소리를 보탰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복지를 원하면 세금을 더 내라’는 보수 언론들의 주장과 뭐가 크게 다른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 증세론은 평범한 대중뿐 아니라 가장 열악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지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첫째, 보편적 증세론은 이제까지 복지가 확대되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는 효과를 낸다.

조세도피처에 숨긴 돈이 9백조 원이 넘는 것에서 보듯, 기업과 부자들은 막대한 탈세를 저질러 왔다. 삼성 이견희는 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차명재산 보유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상속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떼먹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가 “서민과 중산층에 매우 유리한 조세 구조”(양재진 교수, <한겨레>)라는 말은 어안이 병병할 정도다.

게다가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21위로 낮은 편인데도 정부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감세 혜택을 쥐 왔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법인세 비과세 감면액이 55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부자 감세는 유지하고 노동자 증세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는데, 이를 “진보적 조치”라고 환영하는 것은 제 발등을 제가 찍는 것밖에 안 된다.

둘째, 고임금 노동자가 먼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려, 복지 확대를 달성할 동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만든다.

이런 논리가 커질수록 복지가 더 필요한 저소득 노동자들은 고소득 노동자들이 세금 인상에 반대해 복지 확대가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반대로 고소득 노동자들은 돌아오는 복지 혜택은 얼마 없는데 자신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격차는 계급 간에 존재

한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다. 10대 기업 임원 보수가 3백8퍼센트 증가할 때 노동자 임금 증가는 29퍼센트로 10분의 1에 그쳤다(<한겨레>). 노동자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의 고통을 감내해 왔지만 이런 희생은 결코 복지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부유세

따라서 지금은 더 나은 처지의 노동자에게 양보하라고 말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기업과 부자들이 먼저, 더 많은 세금을 내 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며 투쟁을 호소할 때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협의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봐도 ‘타협’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복지 확대가 가능했다.

영국의 NHS와 같은 무상의료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진적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는 분위기에서야 도입됐다. 한국에서 전 국민이 적용받는 건강보험이 만들어지고,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도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확대하려면 ‘부자에게 증세를 해서 노동자·서민에게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부유세 도입은 2002년 대선 때부터 진보정당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그러나 2011년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야권연대를 강조하면서 부유세 요구를 후퇴시켰고, 지금 일부 진보정당이 보편적 증세론을 펴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물론 자본가들은 어떻게든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싶어 하고, 이 때문에 스웨덴, 영국 같은 나라에서조차 사실상 고소득 노동자들이 낸 세금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이런 복지라 하더라도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먼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은 복지 확대를 가로막는 진정한 책임을 가리고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약하게 만들 뿐이다.

정선영

개성공단, 이산가족, 금강산 ...

박근혜에게 평화를 기대하는 게 헛된 이유

김영익

최근 남북 당국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뒤이어 박근혜는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며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NLL 포기’ 운운하며 난리치던 자들이 ‘DMZ 평화 공원’을 말하니 황당할 지경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제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라며 포장해 주고 있다.

주류 언론은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등의 과정에서 박근혜의 ‘원칙론’이 잘 먹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의 ‘원칙론’은 올해 내내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해 왔다.

얼마 전까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높여 왔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 자체가 박근혜식 ‘원칙’이 낳은 결과였다. 북한 측 수석대표의 ‘격’ 등을 생트집 잡아, 박근혜는 6월 남북 당국 회담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오히려 이번 재가동 합의는 박근혜 쪽이 ‘북한 책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물러서면서 가능했다.

춧불

춧불시위 등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박근혜는 기존의 대북 강경책에서 한발 물러서야 했던 것이다. ‘춧불이 개성공단을 살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합의하기 전에, 국정원 정치공작을 규탄하는 촛불은 날로 커지고 있었다.

게다가 세계개편안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서, 박근혜는 4일 만에 후퇴해야 했다.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는 ‘남북관계 개선’ 카드를 내세워, 위기를 벗어나는 데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 60년 동안 지배자들은 남북관계를 곧잘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지배자들은 단지 남북관계의 “냉풍”(대결)뿐 아니라 “온풍”(화해)도 이용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노동자 저항을 공격했다. 박정희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유신헌법을 밀어붙인 바 있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정부는 롯데호텔·사회보험 노동자들의 파업을 짓밟았고, 노동자 투쟁은 남북 화해 분위기를 해치는 것으로 비난 받았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자마자, 박근혜는 8월 15일 국정원 정치 공작을 규탄하는 시위대를 향해 집권 후 최초로 물대포를 쏘다.



박근혜가 절대 열어 줄 수 없는 ‘행복한 통일시대’ 공단 철수 사태 당시 텅 빈 개성공단 남북 출입경 게이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첩첩산중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에 나서지 않는 것도 현재의 남북 대화에 영향을 줬다.

미국 지배자들 일부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멘소리를 낼 만큼, 오바마의 대외 정책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서 핵심은 아랍 혁명에 대한 대응이다. 오바마는 집권 초부터 ‘아시아 회귀’를 외쳤지만, 아랍에서 미국 패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는 없다.

지금 오바마의 ‘발등의 불’은 이집트 혁명이고, 한동안 북한은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기 어렵다. 미국은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며 시간을 벌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

단 재가동을 추진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불안정에 빠뜨리는 근본 요인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근본 요인들

북한을 핑계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직접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 박근혜는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한편,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미국과 대화할 기회를 잡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개성공단 협상에서도 일부 양보를 감수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처를 보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고 있다.

설사 미국이 대화에 나서도, 과거의 패턴대로 시간만 끌다가 북한의 뒤통수를 치며 위기를 다시 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북미, 남북 간에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리라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미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에서 재가동 합의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온갖 우여곡절이 벌어졌다. 앞으로 한반도 불안정이 또다시 커지면 개성공단 등은 다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낙관하기 어렵다. 북한은 금강산이 주는 실리적 이득 때문

려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운동의 일부인 자주파 동지들이 북한 지배계급과 남북 관계를 이용하는 지배자들에 대해 혼란스런 태도를 보인 적이 많았다는 것이다.

자주파 동지들은 반정부 투쟁에 헌신하다가도 ‘민족화해’를 고리로 계급 동맹을 추진하면서 모순에 부딪히곤 했다. 김대중 정부 때 일부 자주파 동지들은 민주노총의 김대중 퇴진 요구를 반대하면서 그 혼란을 드러낸 바 있다. 김대중이 ‘민족화해에 앞장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박근혜는 노골적인 친미 우파 정부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8월

에라도 관광 재개를 서두르려 한다.

반면 박근혜와 미국은 “금강산 관광 대가로 지급하는 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때문에 남북 당국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다가 일시적으로 대화 국면이 찾아 오는 건 그리 낮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갈등 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한반도에서 일시적 대화 국면은 위기의 전주곡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 운동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15일에 이산가족 상봉과 DMZ 평화공원 등을 제안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난 4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일관되게 추구하면 적극 돕겠다”며 혼란을 드러낸 바 있다.

8월 14일 〈민중의 소리〉는 “계급협조에 기대를 거는 것은 진보운동을 망치는 길”이라고 옳게 지적했다. 그러나 동시에 “통일 없이 민주(복지) 없다는 진리가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와 복지를 위한 노동계급의 투쟁보다 통일(남북 화해)을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바로 계급 협력주의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전두환·4대강 털기로 시선 돌리려는 꼼수

박근혜는 위기 탈출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 등을 동원해 자기 편의 일부를 털었다.

7월 중순에는 불법정치자금 추징을 거부해 온 전두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숨겨진 재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처남 이창석이 구속되고 아들들로 과녁이 옮겨지고 있다.

7월 말에는 감사원이 이명박의 4대강이 대운하를 위한 위장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밝혀 냈다.

아무리 박근혜에게 당한다고 해도 저역겨운 전두환, 이명박에게 동정심을 느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박근혜에게 쏘리는 파가운 눈초리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술책임은 뻔하다.

사실 나라 전체를 자기들 재산처럼 여겼을 박근혜 가족에게는 전두환이 준 돈도 푸대접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박정희

와 거리두기도 못마땅 했을 것이다. 쿠데타 스승이 죽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여기고 앙심을 품어 왔을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에도 대권 후보 자리를 두고 다했던 구원이 있다.

공범

그럼에도 박근혜의 전두환, 이명박 공격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어제의 공범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시도는 분노한 촛불이 수만 명 규모로 확산하던 바로 그 시점에 개시됐다.

그러나 이런 기만적인 꼬리 자르기조차 순탄치 않을 것이고, 박근혜가 의존하는 우파 결집에 균열을 낼 수 있다. 이미 이명박과 전두환도 ‘우리도 박근혜 쪽 비리를 갖고 있다’, ‘박근혜에게 준 6억 원’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은 “검찰이 팔 걷고 나선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환수와, 재벌 기업 때리는 일이고 ... 종북 세력 척결 등 ‘굴치 아픈’ 일들은 피해 다닌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꼬리 자르기조차 시늉에 그치거나, 몸통을 지키려는 꼼수로 쓰러는 박근혜를 두고 봐선 안 된다.

김문성

경제 위기 고동전가 공세에 파열구를 낼

현대차 임금 인상 투쟁은 정당하다

현대차노조가 파업을 시작하자 우파 언론과 현대차 사측은 “1억에 1억 원 더”, “슈퍼 갑 노조”, “현대차 노조 생떼 쓰기 … 멍드는 경제”라며 파업을 비난하고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2008년 이후 현대차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대체로 물가상승률 수준이었고, 현대차 사측이 챙긴 당기순이익 규모와 상승률에 턱없이 못 미친다. 2009년에는 경제 위기를 이유로 기본급은 동결됐지만 오히려 사측의 순이익은 2008년의 두 배가 됐다!

» ‘귀족 노동자’의 고달픈 삶

게다가 현대차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은 뼈빠지게 장시간 일한 것의 대가다. 현대차 19년차 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약 1백80만 원이다.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5퍼센트다.

19년차 정규직 노동자가 잔업, 철야, 특근까지 하루 13시간씩 일해야 연봉 7천7백만 원을 손에 쥌 수 있다. 이렇게 1년에 20여 일밖에 안 쉬고 3백30여 일을 일하던 정규직 노동자 10여 명이 지난해에 과로로 죽었다.

주간연속2교대제가 도입됐지만, 현대차에 기술직(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여전히 2천5백 시간에 육박한다.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무려 8백 시간(약 5개월)을 더 일하는 것이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다른 해외 공장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더 비싸다는 현대차 사측의 비난도 거짓이다.

현대차 사측이 2012년 초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장시간 근로 개선 계획서’를 보면 “현대차 조합원은 미국 자동차 공장 노동자 시급의 41.6퍼센트를 받고, 노동시간은 4.2개월을 더 일”했다(〈현대차지부 쟁대위 속보〉). 낮은 시급을 벌충하느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 노동자들의 중요한 과제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이번 임금 인상 투쟁은 중요하다.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이 올라야 그만큼 잔업과 특근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 투쟁의 승리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여 노동시간 단축 투쟁으로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유리지갑도 털리고

현대차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의 대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금이 기다리고 있다. 한 근속 34년차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는 “지난해 잔업·특근·철야 수당과 성과급까지 다 합쳐 연봉 1억 8백만 원을 받았다. 이중 세금만으로 1천6백만 원을 떼어 갔다. 10퍼센트 이상을 세금으로 낸 셈이다. 주말 특근을 네 번 하면 한 번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떠인다”고 한다. 매달 특근 한 번을 국가에 무료봉사하는 셈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유리지갑 털기로 현대차 노동자는 1백만 원을 더 털리게 생겼다.

» 모든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투쟁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정당한 또 다른 이유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긍정적 영향에 있다. 투쟁의 성과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는 것이

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 정규직 임금 인상률이 10.6퍼센트로 가장 높았던 2003년에는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도 10년 사이 가장 높은 6.9퍼센트를 기록했다.

그래서 경총은 2006년에도 “5천 명 이상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주도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평균임금이 올라간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현대차에서 임금 인상 투쟁이 승리한다면, 경제 위기와 물가인상에 고통받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 투쟁의 정당성과 자신감을 제공할 수 있다. ‘고임금 노동자들도 임금을 올리는데 우리도 올리자’고 말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한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계속 줄고 있다.

그 점에서 우파들이 공세를 퍼는데 반해서 대다수 좌파가 현대차 파업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현대차 파업의 효과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규직 고소득 노동자들의 잇속 챙기기만으로 보는 부적절한 견해 때문일 것이다.

»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정몽구의 ‘돌아온 해결사’ 현대·기아차 노무총괄 부회장 윤여철은 “생명을 건다는 심정으로 노조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두 시간 이를 부분 파업에도 우파 언론들과 경총은 길길이 날뛰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차는 한국 경제의 핵심 작업장이며 파급력이 크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오른팔’이라는 민주노조가 ‘3년 무쟁의’를 뚫고 지난해에 투쟁의 근육을 다시 사용했다. 올 상반기 특근 거부 투쟁은 살아나고 있는 현대차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보여 줬다. 그리고 이제 파업을 시작했다.

현대차 투쟁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불리하지 않다.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를 두고 박근혜는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유리한 상황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현대차지부 쟁대위는 두 시간 부분 파업 이후에 다시 이를 동안 네 시간 부분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사측의 태도나 우파들의 공세를 볼 때, 그리고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바람을 고려할 때, 파업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파업은 힘을 극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관심과 투지를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해 파업을 돌아보면, 철저하게 부분 파업으로 일관해 투쟁이 질질 끄는 역효과를 냈다. 따라서 올해는 전면 파업을 벌여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올해 정규직 입단투 쟁의에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함께 내걸고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신규채용을 강행하는 사측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정규직 투쟁에 대한 온갖 왜곡과 비난에 맞서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동자들의 공동투쟁도 중요하다. 그 점에서 기아차가 부분파업을 시작하고, 현대차 계열사 노조 공동 투쟁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반갑다.

공동의 적에 맞서 공동 투쟁을 벌여 현대차 사측을 물러서게 만들자.

김기선·허수영



모든 공은 내리고 단결을 외치는 현대차 노동자들

8월 23일 1공장 파업집회 네 시간 파업으로 생긴 ‘손실’ 8백56억 원은 그동안 정몽구가 얼마나 현대차 노동자들을 착취해 왔는지 잘 보여 준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4.7%	2.8%	3.0%	4.0%	2.2%
현대차 임금인상률 (통상급대비)	4.6%	(기본급 동결)1.6%	4.0%	4.45%	5.4%
현대차 당기순이익 (전년대비증가율)	1조 4479억 원	2조 9615억 원 (104%)	3조 4762억 원 (17%)	4조 7409억 원 (36%)	5조 2734억 원 (11%)

자료: 소비자물가상승률 - 통계청, 현대차임금인상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해외 생산으로 현대차 노동자의 힘이 약해졌나?

보수언론이나 현대차 사측은 파업 손실분을 해외 생산으로 채워서 파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사측은 ‘귀족노조’ 때문에 해외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파업 효과가 떨어졌고, 오히려 파업이 일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파업 효과가 떨어졌다면 언론과 자본가 단체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현대차 파업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 사측도 두 시간 이를 부분파업으로 이미 8백5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파업으로 부족한 생산량을 당장 해외

생산으로 채우기는 쉽지 않다. 현재 현대차 국내 공장에 밀린 주문량만 21만 대다. 2012년 전체 해외 공장 월 생산 대수는 24만 대였다. 당장 주문량을 맞추려면 모든 해외 공장을 두 배로 가동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3교대 풀가동 중인 해외 생산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산업연구원 조철 주력산업팀장)

그리고 현대차는 여전히 전체 생산량의 44퍼센트를 국내에서 생산한다. 더구나 현대차는 국내 생산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해외 생산 비중이 국내 비중을 역전한 2010년에 해외 생산이 전체 생산의 51.9퍼센트를 차지했지

만, 순이익의 비중은 23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김철식·이종탁, ‘현대차그룹과 주요 동반 진출 업체의 글로벌 생산 현황과 실태’)

그럼에도 경제 위기 악화가 국내 생산 축소와 일자리 위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대응이다. 1998년 현대차 노동자들은 사측의 정리해고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 냈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인 1930년대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은 투쟁에서 승리했다. 노동자들의 조직과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투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김지태

현대차 파업이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나?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철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 도시] 디트로이트가 극심한 노사분규와 부채로 파산했듯이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떠나면 모두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현대차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우선, 디트로이트와 현대차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받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기업들과 달리 현대차는 지난해에만 5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디트로이트의 위기는 1980년대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일본 기

업들에 밀리면서 시작했다. 경제 위기 여파로 2009년 GM이 파산하자 위기가 더 심해졌다.

‘강성노조와 노사 분규’가 위기의 원인이라는 말도 거짓말이다.

오히려 2009년에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은 정부와 타협해 노동조건 개악을 받아들였다.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와 임금 삭감이었다.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자본주의 경쟁 체제 자체에 있다. 자본가들 사이의 이윤을 위한 무한 경쟁이 끊임없이 승자

와 패자를 만들고, 어느 순간 이윤을 기대할 수 없어 투자를 중단하며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저들은 현대차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이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임금 인상 역제는 소비 능력을 떨어뜨려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구실을 할 뿐이다.

현대차 투쟁은 오히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동전가 공격을 막아 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

김지태

혁명과 반혁명의 기로에 선 이집트

힘을 모아서 결사적으로 군부에 맞서야 한다

주디스 오어

8월 초 이집트 군부는 거리에서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했다.

군부는 쫓겨난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와 무슬림 형제단 지지자들이 카이로 광장에서 벌인 연파 시위와 이슬람 사원 잠거 시위를 공격했다.

8월 19일 보안군은 좌수 호송차 안에서 무슬림 형제단 지지자 36명을 죽였다. 보안군은 밀폐된 공간에 가스를 발사했고 사람들은 질식사했다.

시제 보관소는 시제로 넘겨났고 자원봉사자들은 선봉기와 얼음주머니를 이용해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다.

“유가족들은 사망자가 자살했음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해야만 시신을 인도받아 매장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회원 하림 탈리마의 말이다.

사망하는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물어 주려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문서에 서명하는 유가족도 있다. 그러나 사망자가 죽은 진짜 이유를 알아야겠다며 서명을 거부하는 유가족도 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런 짓을 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저는 제 남동생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부는 7월 3일 권력을 차지한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을 2천5백 명 넘게 학살했다. “학살당한 사람들에 대한 합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수천 명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림이 말했다.

하림은 혁명을 “수호”한다는 지역위원회가 사실은 무슬림 복장을 한 여성을 회롱하고 턱수염을 기른(남성 무슬림의 관행) 남성을 폭행하는 정권의 강대들로 이뤄져 있다고 전한다.

턱수염

“군부는 파비린대 나는 군부 독재를 강요하고, 무바라크의 측근들을 정부, 언론, 재계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언론은 2011년 1월 25일의 혁명을 역모로 묘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군부를 혁명의 창조자이자 수호자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림은 군부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혁명의 힘, 특히 지난 6월 30일의 대규모 시위가 있기까지 계속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의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노동자 투쟁의 발전은 무르시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광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군부는 독립노조 지도자인 카말 아부 아이타를 정부로 끌어들이었습니다. 군부는 정권과 노동자 운동 사이에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군부는 혁명에 반격하는 데 성공했다. 군부는 무르시의 통치에 반대한 광범한 분노를 이용해서 지지를 얻었고, 사람들을 거리로 동원할 수 있었다. 군부는 또한 많은 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자유주의자, 급진 민주주의자, 옛 좌파들은 기회주의적 속성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일부가 되기로 했다.

민족주의자인 합딘 사바히 같은 저명한 인물들이 군부의 무슬림형제단 공격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나 ‘4월 6일 청년 운동’ 같은 단체들은 군부의 폭력을 지지하지 않는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67호 / 번역 이진화



이집트 군부는 '테러와의 전쟁' 중 군부는 무슬림형제단에 이어 혁명 자체를 '테러'라며 도둑하고 싶어 한다.

권력을 되찾으려는 반동세력

이집트 법원이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를 석방했다.

많은 이집트 민중의 피를 손에 묻힌 끔찍한 독재자가 감옥에서 유유히 걸어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은 이집트 혁명이 위기에 처한 시기에 발표됐다.

무바라크는 2011년에 있었던 18일의 항쟁 동안 시위대 8백 명을 학살했다. 수 많은 이집트 민중은 지금도 이 끔찍한 독재자가 심판받기를 바란다.

혁명으로 사람들은 선거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무슬림형제단의 무함마드 무르시가 이끄는 정부가 등장했다.

그러나 반군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무르시에 대한 광범한 분노가 자라났고 무르시는 이 분노의 물결에 떠밀려 쫓겨났다.

무슬림형제단 정부가 몰락한 이후 군

부는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 새로운 정부는 “테러리즘 진압”이라는 이름으로 무슬림 형제단을 폭력적 탄압하고 있다.

“군부는 저녁 7시 이후로는 통행을 금지하는 조처 등 탄압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의 하림 탈리마가 전한다.

“국방장관 엘 시시는 탄압 정책을 시행하면서 혁명을 위한 조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군부는 7월 3일에 권력을 잡은 이후로 2천4백 명을 학살했습니다.”

불법화

무슬림형제단 지지 시위대는 살해당했고, 무슬림형제단 지도부는 체포되고 수감됐다.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다시 불법화하겠다고 협박했다. 무슬림형제단은 무

바라크 시절에 수십 년간 불법 조직의 신세였다.

하림은 말한다. “혁명적 세력은 현재로서는 대안 세력이 되기에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 내재하는 모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바라크 시절의 국가가 여전히 견재한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는 반혁명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군부와 새로운 정부가 저지르는 엄청난 만행을 보며 사람들은 군부와 새로운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맞나 하는 의심을 한다.

“노동자들은 노조 지도자 카말 아부 아이타가 군부가 임명한 새로운 정부에 입각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자마자 노동자들은 군부가 수에즈 노동자 파업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했고,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닥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의 호팜 알하말 라위는 국가와, 국가가 저항을 파괴하는 데 이용하는 징집병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가난하고 불쌍한 징집병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징집병의 형제, 아들, 사촌, 이모, 삼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낄을 결과는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징집제를 기초로 한 군대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림은 지금 혁명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혁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67호 / 번역 이진화

무슬림형제단 탄압은 반혁명의 고리다

필 마를리트

이집트 군부는 왜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조직원 수백 명을 살해하고 조직을 불법화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인가? 2년 전만 해도 군부는 무슬림형제단과 협력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길래 군부는 이러는 것인가?

최고군사위원회에 있는 엘 시시와 그 측근은 무바라크 정권의 핵심적 일부였다. 장군들은 제조업, 상업, 금융업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집트 국가자본주의 체제에는 국유 자본과 사적 자본이 공존하는데 군부는 그 중심에 있다.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자 군부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웠다. 군부는 혁명

을 통제할 목적으로 무슬림형제단과 동맹을 맺었다.

군부는 무슬림형제단과 아합한 대로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선거 제도를 마련했다.

그 결과 2012년 선거에서 무슬림형제단의 무함마드 무르시가 대통령으로 당선했다.

그러나 무르시는 군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무르시의 재임 기간 동안 노동자 운동은 오히려 자신감을 빠르게 키웠고 파업 건수는 이전 어느 시기보다 많았다.

무르시는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초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그 대신 무르시는 자기 지지자

들을 주지사과 상급 판사로 임명했다.

혁명 운동은 무르시에게서 등을 돌렸다. 올해 4월부터 ‘반란’ 운동은 무르시 퇴진 요구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초반에 수백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혁명이 되려 급진화한 상황에 놀란 최고군사위원회는 군부를 이끌고 다시금 정치 최전선에 뛰어들었다. 군부는 재계와 언론계 거물들과 함께 ‘반란’ 운동을 지원했다.

6월 30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바로 며칠 뒤 군부는 무르시를 끌어내리고 무슬림형제단을 향한 악선전을 해대기 시작했다.

군부는 무슬림형제단이 대중운동을 통제하길 기대했는데 그 효용이 다 했기 때문에 더는 동맹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 무슬림형제단은 ‘살인마’ 또는 ‘테러리스트’로 불렸다.

무르시 정부의 위기가 분명해지자 군부와, 미국과 걸프국들의 군부 조력자들이 정지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증거들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민중은 “뽕, 자유, 사회 정의”를 요구하며 혁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직전에 그들은 개입했다.

군부는 사람들이 삶을 지키려고 투쟁하면서 쌓아 온 분노가 무슬림형제단을 향해 돌려지길 바란다. 군부가 최종으로 바라는 것은 무바라크식 통치로 복귀하는 것이다.

엘 시시는 자기가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군부는 혁명 운동 전체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67호 / 번역 장다운



2011년 군부 반대 시위 당시 가센 학살자 퇴진 요구 때문에 군부는 정치 일선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차근차근 반혁명을 준비해 온 군부

김종환

지금 이집트에서 벌어지는 학살은 군부가 오랫동안 호시탐탐 노리던 반혁명을 본격적으로 개시했음을 보여 준다.

1년 전 거센 반발에 떠밀려 무슬림형제단에 정치 권력 일부를 양보했던 군부는 그 이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무르시 정부는 “뽕, 자유, 사회 정의”라는 혁명의 요구를 커녕 생필품 공급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며

퇴진 이전부터 정치적으로 빠르게 추락했다. 그리고 그만큼 정치적 공백이 생겼다.

말로만 혁명을 떠드는 기회주의자들은 군부가 그 공백을 메우도록 도왔다. 국군 전선으로 대표되는 기회주의자들은 무르

시 퇴진 이전부터 군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그리고 6월 30일, 혁명을 배신한 무르시 정부에 분노한 수천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직후에 군부는 혁명이 더 급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르시를 끌어내렸다. 그리고는 반혁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기회주의자들은 무르시 퇴진 이후에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 집단’이라 공격하며 반혁명의 명분을 군부에 제공했다.

덕분에 군부는 1년 만에 정치 전면으로 퇴진 이전부터 정치적으로 빠르게 추락했다. 그리고 그만큼 정치적 공백이 생겼다.

말로만 혁명을 떠드는 기회주의자들은 군부가 그 공백을 메우도록 도왔다. 국군 전선으로 대표되는 기회주의자들은 무르

었다. 이처럼 조금씩 조금씩 세력을 넓혀 온 군부는 자신감을 충분히 되찾자 8월 14일부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유희시대를 촉발한 한 달간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간통행금지라는 이런 것은 혁명 전체를 위축시키고 군부와 그 꼭두각시 정부를 향한 일체의 도전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앞서 무바라크 시절의 보안 기구를 부활시킨 내부부 장관은 학살 직후 “이번 기회에 치안 상태를 무바라크 시절로 되돌려 놓겠다” 하고 천명했다. 이어서 법원은 무바라크 석방을 명령했다.

군부가 반혁명으로 노리는 것은 이집트 혁명 자체를 절멸시키는 것이다.

혁명가들의 과제는 무엇인가

오늘날 이집트 현실은 모순적이다. 모순이라는 말은 서로 공존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먼저 군부의 반혁명과 지난 2년 넘게 발진해 온 이집트 혁명이 공존하고 있다.

7월 3일 무르시를 끌어내린 동력은 이집트 혁명의 전진에서 나온 것이었다. 만일 혁명 운동이 없었더라면 군부는 무르시를 퇴진시키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부가 무르시를 끌어내림으로 새 반혁명 세력이 기회를 잡은 것이기도 했다.

이런 모순은 혁명 운동 자체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날 이집트 운동에서 노동자·민중은 혁명적 자신감을 잃어 왔다. 무바라크, 최고군사위원회, 무르시를 모두 끌어내린 민중은 만일 군부가 6월 30일 무르시를 방어하려 들었다면 군부도 함께 날려 버려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혁명 운동은 정치가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 운동은 “무

슬림형제단에 맞서 단결하자”는 군부의 호소에 흔들렸고 반혁명이 그 틈을 파고들 수 있었다.

학살로 드러나는 군부의 반혁명만 보고 노동자·민중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면, 혁명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만 보고 그것을 돌파할 기회는 보지 못할 수 있다. 애초 무르시 퇴진을 위한 운동 건설 자체가 반동적이라는 혼란에도 빠질 수 있다.

혼란

그러나 반혁명을 격퇴할 이집트의 혁명적 잠재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 군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리스트라고 끊임없이 선동하며 대중을 속이고 분열시키려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민중의 잠재력을 군부에 맞선 대중투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군부가 노동자·민중의 편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군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야 한다. 특히 2011년 혁명 이후 일관되게 군부와 억압기구에

분열 지배를

노리는 이집트 국가

7월 3일 군부가 권력을 잡은 이후로 기독교 교회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낙서, 투석, 화염폭탄 투척 같은 방식으로 공격이 벌어진다.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 8천만 명 중 약 10퍼센트를 차지한다.

무슬림형제단은 무르시가 퇴진한 이후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선전을 해 왔다.

반혁명을 응원하는

걸프 왕정·독재자들

서방 정부들이 이집트 군부의 탄압을 이유로 이집트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은 그동안 이집트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해 왔다.

올해는 13억 달러 이상을 원조하기로 약속돼 있었는데, 이것을 재고하는 중이라고 미국은 주장한다.

이에 대응해 걸프국들은 이집트의

그러나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회원 하림 탈리마는 이렇게 말한다. “이집트 국가도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에 대한 공격 중 일부는 국가가 저지른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이런 공격이 있으면 무슬림형제단이 책임을 지게 되고 테러리스트라고 비난받을 테니까요.

“점점 늘어나는 공격에 시달리는 교회를 국가가 방어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공격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2011년 무바라크를 퇴진시킨 18일 동안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은 서로 기도를 보호해 준 바 있다.

새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걸프 지역의 독재자들은 혁명 운동을 분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이 독재자들은 이집트의 새 정부에 돈을 대는 것이 혁명의 발전을 가로막을 기회라고 여긴다.

걸프국 정권들은 자신들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총 1백20억 달러를 이집트의 새 정부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67호 / 번역 최민혁



군에 단결한 시리아 민중만이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8월 10일, 일레르.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설

서방 개입은 독재·학살을 해결할 수 없다

시리아에서 독재자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해 1천3백 명 이상을 살해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가득한 사진을 보면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아사드는 ‘아랍의 봄’의 일부로 시리아에서 2011년 3월 혁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을 살해한 학살자다. 아사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남을 작자다.

문제는 서방이 자신들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상의 학살을 막으려는 심정에서 서방 국가들이 개입하기 바란다. 그러나 서방은 민간인 피해가 아니라 시리아 혁명이 자신들의 제국주의 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시리아 혁명을 왜곡하고 도둑질하기 위해 개입해 왔다. 시리아 민중이 생필품 부족으로 시달리는 현실을 이용해 자신의 말을 듣는 세력만 지원한다.

무엇보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할 때, 자신의 경비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중을 학살할 때 백린턴 같은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아랍 혁명이 이집트 군부의 반혁명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리아에서 서방 제국주의 세력이 군사적 개입을 강화한다면 아랍 혁명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시리아에서 학살이 멈추길 원하는 사람들은 아사드의 학살에 반대하면서도 서방의 군사 개입에도 반대해야 한다.

평범한 시리아 민중의 힘으로 아사드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시리아에서 학살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안이다.

김종환

이집트 군부의 민간인 대량학살
유란 기자회견
일자: 8월 27일(화) 오전 11시
장소: 한남동 이집트대사관

풀리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의 실타래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미국이 올해 안에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하거나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신흥국들이 위기에 빠졌다.

최근 7년간 연평균 8퍼센트씩 성장해 온 인도 경제가 1992년에 이어 또다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가 1997년의 위기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인도의 실물경제를 살펴보면 어떻게 인도 경제가 지금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진다. 2008년 이후 인도 경제는 한 분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인도는 경상수지 적자를 외자 유입으로 벌충했고, 이 때문에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사회(연준) 의장 버냉키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은, 선진국의 값싼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돼 경제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매커니즘의 종결을 알리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에 유입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통화·주가·채권 가치가 폭락했다. 인도의 루피화는 올해 들어 통화 가치가 16퍼센트 하락했고, 브라질의 헤알화는 15퍼센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랜드화는 17퍼센트나 폭락했다. 이 나라들의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음에도 외국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금리를 더 인상하고 있다.

7월 IMF 총재 라가르드는 올해 세계 경제가 신흥국발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책으로 임기응변처럼 사용한 통화량 증대의 부작용이 신흥국들에서 폭발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 이와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케빈 라이는 “양적완화 자금이 아시아에서 거대한 신용 인플레이션 거품을 만들어 냈다”며 “이 범죄는 이미 저질러졌고 우리는 후유증을 감당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후유증

신흥국의 위기를 촉발한 미국의 사정도 나아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인다고 할 때 지표로 실업률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과 주택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든다.

최근 미국 실업률이 7퍼센트대에서 6.5퍼센트로 낮아지긴 했지만, 동시에 구직포기자가 늘고 있다. 이것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실업을 하락 인가 하는 점에서는 연준 위원들조차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늘고 있던 신규주택 건설과 주택매매 건수는 최근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규 주택 구입 비용이 증가하자 상승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다우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 점을 경신했는데, 이것은 매달 8백50억 달러어치의 자산매입프로그램(일명 양적완화)으로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렸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의 투자 수준은 1995년 이래 최저점인데, 이는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성, 즉 **이윤율이 낮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이를 ‘투자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에 풀린 돈들이 이런 투자 위축 때문에 인도와 같은 곳에서 거품경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유로존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호들갑이지만 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소문'만으로도 세계 도처에서 긴장이 높아질 정도로 '회복'은 미미한 수준이다.

분기의 지표만으로 경기 추세가 하강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유로존 경제는 2011년 4분기의 마이너스 0.3퍼센트 이후 여섯 분기 내리 후 퇴했기 때문에 올해 2분기의 0.3퍼센트 상승이 더욱 반가웠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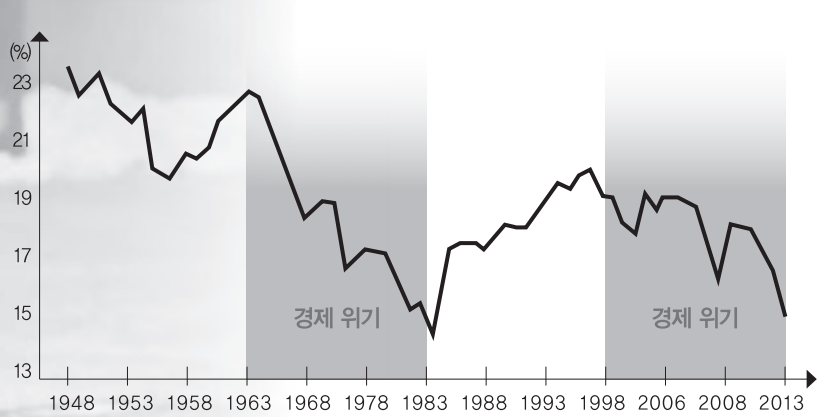
투자 파업

유로존 경제를 플러스 성장으로 이끈 주역은 독일과 프랑스였다. 지난 두 분기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독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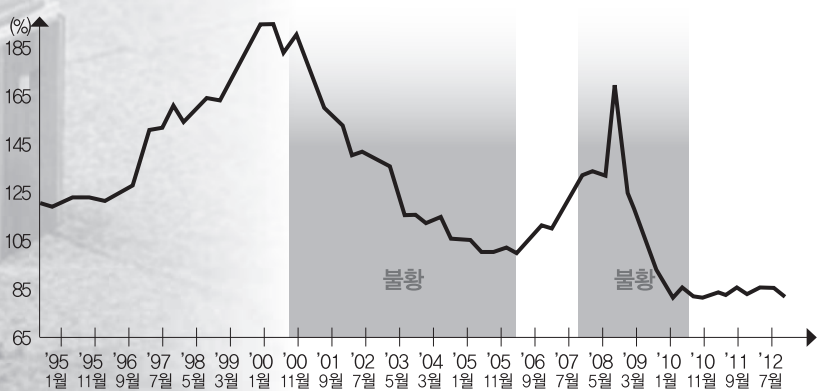
0.7퍼센트, 프랑스가 0.5퍼센트 성장을 하면서 유로존 경제를 이끌었다. 그러나 회복 조짐은 이것이 전부다.

경제 규모가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2분기 성장률은 각각 마이너스 0.2퍼센트와 마이너스 0.1퍼센트를 기록하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유로존 전체의 실업률은 12.1퍼센트고, 특히 스페인의 실업률은 26퍼센트를 넘는다. 그래서 이번에 유로존 성장률이 반동한 것은 그 전까지 경제 지표들이 워낙 바닥 수준

경제 위기 때마다 추락하는 미국의 연도별 평균이윤율



불황이 오면 “파업”하는 부자들 — 이윤 대비 기업 투자 비율



〈레프트21〉 97호에 실린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 인터뷰 — “세계 자본주의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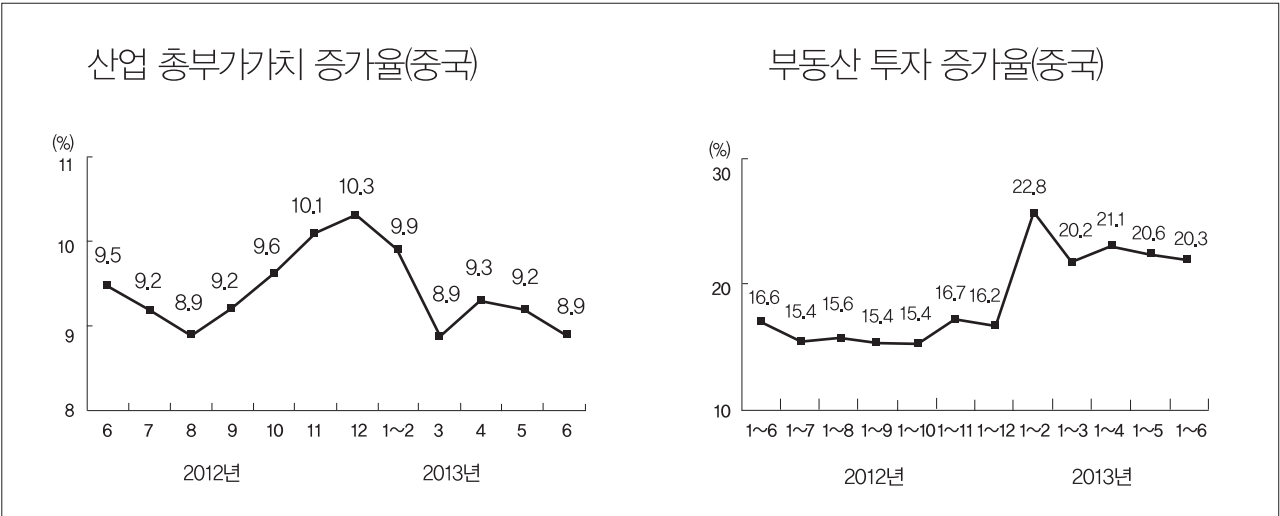
폭풍전야로 보이는 중국 경제

진정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곳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 전문가들도 중국에 대해 ‘폭풍전야’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8월 12일 헤지펀드 골드만삭스는 ‘중국 신용우려’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 기업, 가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7년 1백53퍼센트에서 지난해 2백9퍼센트로 5년 사이 56퍼센트 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5년간(2002~07년) 기록한 부채비율 상승폭인 46퍼센트포인트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국가 부채를 계산하는 통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부채 비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08년 이래로 국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분명하다. 2008~09년 중앙정부는 경기부양에 4조 위안을 썼고, 국유상업은행들은 9.5조 위안을 기업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대출해 줬으며, 지방정부들은 경기부양책으로 18조 위안을 풀었다.

이런 자금은 낮은 이윤율 때문에 생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 지난 13개월 동안 중국의 산업생산, 경제성장률 등은 둔화했지만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통화량 증대로 거품이 형성된 것이다.

총리 리커창의 등장과 함께 알려진 ‘리커노믹스’가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리커노믹



실물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부동산 거품은 커지는 중국 중국의 암울한 경제전망은 세계 자본주의 지배자들에 커다란 근심거리다.

스의 핵심은 중국의 성장률을 7퍼센트대로 유지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한편 철도나 환경 등의 SOC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과잉설비를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 정부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19개 업종의 기업 1천4백 곳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런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의도치 않게 중국 지배계급의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리커노믹스에서 가장 힘든 과제는 중국 경제의 체질을 수출주도형에서 소비(내수)위주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중국은 고도성장과 수출경제를 위해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GDP에서 소비의 비중이 2000년 43퍼센트에서 2010년 34퍼센트로 하락했다. 수출주도 경제를 유지하면서 소비를 늘려서 7퍼센트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현재 중국 경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구조조정

최근 선진국의 경기위축은 중국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만들었고, 이는 다시 원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을 위기로 내모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수익성 하락, 성장을 둔화, 거품경제

유로로 비슷하고, 그리스(7백억 유로)도 두 수치가 비슷하다. 이로 볼 때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은행들은 여전히 ECB의 LTRO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의 여파가 그리스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논의가 있다는 사실은 유로존 경제가 여전히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다.

형성은 중국 경제를 폭풍전야로 보는 주요한 근거들이다. 중국의 성장을 둔화는 신흥국과 뒤이어 선진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것이 부메랑이 돼 중국 경제를 더 나락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08년 이후로 6년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회복다운 회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단단히 잘못된 체제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일 것이다.

박근혜는 이 잘못된 체제의 일부로서, 정치 위기에 휘말려 있지만 실패한 체제의 고통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데 누구보다 열심이다.

군국주의로 내달리는 아베와 한·미·일 동맹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아베 내각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아베는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 장관에 집단적 자위권* 찬성파로 알려진 인물을 임명했다. 헌법 해석을 바꿔서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아베는 헌법 개정이 자신의 “역사적 소명”이라며 다시 한 번 강력한 개헌 의지를 밝혔다. 부총리 아소 다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헌법을 바꾼 나치의 수법을 배우자’고 말해 비난을 샀다.

얼마 전 일본은 사실상 항공모함인 ‘이즈모호’를 진수했고, 해병대 창설도 준비하고 있다. 곧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로켓 발사 실험도 한다.

일본은 그동안 전수방위*라는 원칙에 따라 이른바 공격용 무기로 분류되는 항공모함, 대륙간탄도미사일, 해병대는 만들지 않아 왔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를 선제공격하거나 침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역사 부정도 계속되고 있다. 아베 내각 관료들과 자민당 국회의원 1백여 명은 8월 15일 ‘종전기념일’을 맞아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는 일본제국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욱일기 사용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정부 공식 견해로 채택하려 한다.

현재 일본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중국의 부상이 낳은 위기감 속에서 군사대국으로 거듭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은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든든한 후원자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국의 대 중국 포위 전략하에서 날개를 달았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맥락에서 벌어지는 역사 부정은 한국과 중국과 같은 아시아 주변국들의 반발을 낳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도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여지껏 정상회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출처: 한국 공군

갈수록 군사적 벽을 허물고 있는 한국과 일본 최근 한국 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와 첫 합동 훈련을 벌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위선적이다. 최근 한국 공군은 알래스카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첫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향한 한 단계 전진이라고 볼 수 있다. 미 공군 사령관은 “역사를 이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5월 아베와 극우 세력들의 역사 부정 망언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한국군은 미국·일본과 함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한국 정부는 이 나라 평범한 사람들의 정서를 의식해 겉으로는 일본 지배자들의 우경화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지배자들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호응하기 때문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라는 기조 아래 한국과 일본

은 조금씩 군사적 벽을 허물고 있다.

일부 한국 지배자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한국의 안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안보현실”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확히 미국의 관점이기도 하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예컨대 “일본이 국방비를 더 지출한다면 미사일방어체계(MD)나 핵확산 방지 등이 활성화될 것이고, [한국 방어에도 필수불가결한] 더 많은 미군이 일본에 주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반대로] 일본은 미사일 방어나 특공대, 테러리스트나 잠수함 등에서 매우 취약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방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 이른바 ‘트랙 접근’(과거사 부정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 같은 문제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과 헌법 개정 같은 보통국가화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아시아 민중 입장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재앙일 뿐이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경쟁과 불안정을 부추겨 이 지역을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일본 지배자들의 군사력 강화 시도에 반대하고 나아가 제국주의 체제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 일본 지배자들의 시도에 반대하는 일본 내 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항의 행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현주

집단적 자위권

자국이 직접 적의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동맹국이 군사 공격을 받으면 무력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다. 집단적 자위권은 침략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이라크를 침략했다. 그동안 일본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시도는 주로 미국이 벌이는 전쟁과 작전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전수방위

일본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방어를 목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원리.

철도 구조조정 저지 투쟁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도 확산되고 있다.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강제 순환 전보에 맞서, 전기 노동자들은 장비운전 업무 외주화 시도에 반대해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두 직종 노동자는 각각 전국 집회를 열어 자신들을 쥐어짜려는 철도공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열차 노동자들이 전국 집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비변자들이 전원 참가했다. 전기 노동자들도 6백 명이나 참가해 열기를 보여 줬다.

많은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철도공사 측의 강제 전보 공격을 민영화 사전 포석이라고 본다. 민영화 전에 사측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노동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또,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해 몸집을 줄여 보려는 수순”이라고 지적한다. 노동자들을 여러 업무에 ‘유연하게’ 투입해 신규채용은 늘리지 않고 부족 부분을 뺄 줄하려는 것이다.



“민영화 저지 투쟁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투쟁을 막아 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기 업무 외주화는 정말이지 ‘마른 수건 쥐어짜기’다. 그동안 철도공사는 전기 인력을 감축해 노동강도를 강화했는데, 지금 장비운전 업무를 외주화하고 인원을 더 줄이려 하는 것이다.

장비운전 업무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업무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이나 도시철도는 장비운전 업무를 외주화하지 않고 있다. 전기 노동자들은 장

비운전 업무 외주화를 막지 못하면 신호·통신·변전 등으로 외주화가 확대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본보기

지금 열차 조합원들은 휴일근무 거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1백 퍼센트라고 한다. 전기국도 <전기직종신문> 특별호까지 내며 조직력을 다지고 있다.

철도공사가 민영화의 서곡으로 고용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이를 저지하고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 구조조정은 철도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므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은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과 하나다. “민영화 저지 투쟁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투쟁을 막아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전기직종신문>)는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역사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들은 대부분 민영화를 앞두고 매각 가치를 높이려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대량 감원, 외주화, 근무 유연화 등이 그 방법으로 사용됐다. 독일 철도 역시 민영화를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조직력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투쟁은 민영화 반대 파업을 앞두고 중요한 전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기관사 노동자들은 1인 승무제

확대 시도에 맞서 싸워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고 자신감을 크게 얻었다. 이런 승리가 열차와 전기 쪽으로도 확대돼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직종별로 벌어지는 투쟁이 더 확대되고 다른 직종 노동자들도 함께 싸워야 한다. 각 직종별 대응을 넘어 철도노조 전체가 구조조정 문제에 맞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

최근 기관사 노동자들이 열차 승무 노동자들의 휴일근무 거부 투쟁을 지지하며 대체근로 투입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좋은 출발이다.

또, KTX민영화저지범대위를 비롯해 철도 민영화 반대 지역·권역 대책위들이 철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고용 구조조정은 민영화와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기관사 1인승무 확대 저지 투쟁에서 철도민영화 반대 지역대책위의 연대가 기관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큰 힘이 된 것은 좋은 본보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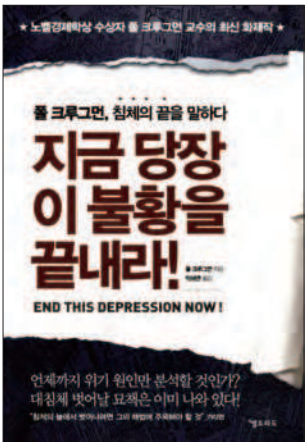
최미진

▶ 관련기사 16면



서평 |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핵심을 비껴간, 신랄한 비판과 폭로



폴 크루그먼 지음, 박세연 옮김, 엘도라도, 328쪽, 16,000원

미국의 세계인스주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이 책에서 이번 위기를 분석하며 케인스주의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크루그먼은 근 20년 가까이 신자유주의와 그 이데올로기적 기반인 우파 경제학을 날카롭게 비판해 온 학자다.

이 책에서도 그는 경제 위기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궤변만 늘어놓는 보수 경제학자들의 비상식성을 폭로한다.

예컨대, 보수 경제학자들 중 상당수는 경기침체가 모종의 '기술적 충격'에 대한 합리적 대응' 탓이며, 실업은 노동자가 내린 '자발적 결정'이라고 말한다.

또 시장은 항상 합리적이고, 소득은 지출되기 마련이므로 투자와 소비가 부족해지는 현상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크루그먼은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상식'적인 주장들을 방어한다. 또한 그는 보수주의 경제 이론은 지배계급을 위해 종사하는 하인 노릇을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현실 설명에 무능한 우파 경제 이론이 여전히 명명거리는 것은 바로 이 이론들이 자본가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 때문이라고 폭로한다. 더불어, 그는 긴축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당한 부분들을 읽을 때는 통쾌하기까지 하다.



그리스 반긴축 투쟁 노동자 투쟁을 일관되게 옹호하는 관점에 사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읽을 때 부족한 점과 문제가 되는 점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그는 소비와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부채의 누적과 자산가격의 폭락이 2008년 위기가 발발하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케인스와 그의 후예 경제학자인 민스키의 이론을 빌려 와서 위기를 설명한 것이다.

물론 겉보기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는 문제의 근원을 짚지는 못한 것

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원에는 자본축적으로 인한 이윤율 저하가 있다. 앤드루 클라이먼이나 로버트 브레너 등 여러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통계는 바로 이 점을 증명하고 있다. 즉 이번 위기는 축적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크루그먼의 주장과는 달리, 케인스주의적 대안을 통해 쉽게 극복될 수 없다. '경제 엔진이 망가지지는 않았다'는 그의 주장은 이 점을 놓친 것이다.

위기의 책임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은 주류 케인스주의자들의 설명에서 쉽게 발견되는, 흔하디 흔한 오류다. 그러나 이 책에는 더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

스페인 등 남유럽의 경제를 다루는 이 책의 후반부는 매우 잘못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남유럽 국가에서 임금수준이 크게 올라 제조업 부분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심각한 무역 불균형이 벌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점이 그 국가들의 위기 발발에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말한다.

또 그는 유로존 통합이 위기 극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도 유로존을 해체하는 것은 너무 큰 비용을 수반한다며 유로존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남유럽 국가들의 제조업이 빈약한 것은 아니다. 스페인의 경우, 국민경제의 17.4퍼센트를 제조업이 차지하는데, 이는 유럽 평균보다 조금 낮기는 하지만 영국과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고 미국보다는 오히려 높다.

게다가 그의 주장은 이번 위기의 책임자인 자본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크루그먼은 우파 경제학자들이 자본가들을 방어하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위기의 주범인 자본가들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부도기업이나 은행을 지원해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에게 책임을 묻고,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 등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스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연합(안타르시아)의 주장처럼, 유로존 탈퇴를 불사하고 '아래로부터의 디폴트 선언'을 하는 것이 이 지역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언젠가 다시 이윤율의 위기에 직면할 '더 나은 자본주의'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혁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김종현

서평 | 《노동자의 변호사들: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 사건 10장면》

거꾸로 선 법에 맞선 투쟁의 이야기



민주노총법률원, 오준호 지음, 최규석 그림, 미지북스, 296쪽, 13,500원

기본급이 75만 원인 노동자들이 있다. 그들은 기본급을 1백8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들은 바로 집단 해고를 당했고 파업과 농성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49일간의 농성 투쟁과 여론의 관심과 지지 속에 노동자들은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반전을 맞았다. 학교 당국이 노조 주요 간부 6명에게 손해배상 2억 8천만 원을 청구한 것이다. 다행히 이 소송은 학교 당국의 청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상태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투쟁을 한다는 것은 거의 필연으로 수많은 소송에 부딪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서 한 번 가 본 일 없던 사람들

이 기초돼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한다.

《노동자의 변호사들: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 사건 10장면》은 이처럼 노동조합의 투쟁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률 문제에 대응하는 변호사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경험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민주노총법률원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 10년에 걸친 수많은 사건 중에서 10가지를 추려 조명한다. 대부분 <레프트21> 독자들이 직접 참여했거나 적극적으로 지지 활동을 했던 투쟁들일 것이다.

저항

이 책은 담당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들의 인터뷰 등을 제시하며 기업과 정부가 어떤 식으로 주장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노동자들은 그에 맞서 무엇을 주장

하며 요구했는지 자칫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다뤘다.

이 책에서도 지적되듯이 해결된 문제는 여전히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법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해 법정 다툼만으로 노동자들이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이길 수 있는 경우는 너무나 적다.

그런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투쟁이듯, 강력한 투쟁으로 사회적 여론과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정당 후원 사건은 법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우리는 그 탄압에 어떻게 맞섰는지를 잘 보여 준다.

정권에 이용당하는 걸 막으려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헌법 규정은 교사가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근거가 됐다.

2009년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인 언론탄압 등에 맞서 교사 1만 6천여 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을 했다. 검찰은 곧바로 교사들을 대거 기소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사 2만 8천여 명이 참여한 2차 시국선언으로 응수했다.

그 뒤 검찰은 '쓰레기통까지 뒤지며' 전교조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강탈한 자료로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교사 2천여 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그 뒤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전교조의 저항 속에서 해직이나 징역형이 정직이나 벌금형으로 내려가는 등 징계 수위가 크게 약해졌다.

이처럼 부당한 법과 정부와 기업주들의 탄압에는 더 강한 투쟁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승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송무국장

인천 청소년 시국선언의 목소리

“대한민국은 공주님 공화국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래 글은 8월 15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시국선언 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서요한**(인천 청소년 시국선언 추진위원) 학생이 발언한 내용의 일부다. 지금 이 선언은 1주일만에 8백 명 가량이 참가하며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시국선언 추진위원회' 추진 위원으로 활동하는 서요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공주님의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정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고, 조종동과 같은 주류 언론사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촛불을 숨기기에

만 급급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는데, 이런 증거를 발견하고도 공주님이 낙선하실까 봐 축소하고 숨기고, 대선 3일 전에 거짓말로 꾸며 발표했다는 모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귀태' 발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NLL 등으로 몰타기하며 국민을 정말로 '몰'로 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공주님에게 한 방 날리는 청소년들.

새누리당, 국가기관이라서고 부끄러운 이름을 달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빨'청,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개

검찰, 편향 보도하는 언론이 민주주의를 더럽힌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몸통은 지금 번지를 잘못 찾아가신 공주님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 10시간 전 "국정원은 무죄다"라며 국정원 감싸려고 얼마나 진땀 흘렸을까요. 파란 지붕 집 말고 공주님 집에 들어가서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정치적 권리의 가장 기본인 선거마저 온갖 오물로 더럽혀졌는데, 이 사태를 숨기려고만 하는 새누리당과 조종동 등 한국의 주류 언론들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추진위를 출범하게 된 이유입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지

지와 동참을 호소하고 함께 운동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은 “어린 것들이 무슨 정치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낚은 구닥다리 논리로 막으려 합니다. 대체 청소년이 얼마나 무섭길래.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 인권위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돼야 할 권리는 정치적 권리라 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고요, 우리의 생각과 하고 싶은 말을 외치고 알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 아니가요.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박근혜는 책임지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막으려는 일체의 탄압을 중단하라!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케인스주의가 긴축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세계경제가 여전히 위기를 헤어나지 못하면서 주류 시장주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인기를 얻고 있다. 서점가에서는 폴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등 케인스주의 관련 책이 베스트셀러다. 자유시장에 대한 케인스주의적 비판은 분명히 타당하고 활용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위기는 국가 개입도 자유시장도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치지 못한 과정이기도 했다. 한계와 모순을 드러낸 양적완화, 아베노믹스 같은 돈 풀기도 사실 케인스주의적 성격이 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케인스주의의 약점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근래 긴축에 반대하는 많은 주장들은 케인스주의적이었다.

이것을 보면, 마치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1930년대 대공황과 그 뒤를 따랐던 장기 불황을 설명하거나 혹은 무엇을 할지에 대해 별 기여를 하지 않은 것 같다.

내 생각에 자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케인스주의 이론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다.

먼저 경제학에 케인스가 핵심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살펴보자. 케인스가 거시경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출한 국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일련의 공식을 보면, 국민소득은 국민지출과 같다.

그리고 국민소득은 이윤과 임금의 합이고 국민지출은 투자와 소비의 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윤과 임금을 더한 것은 투자와 소비를 더한 것과 같다. 임금을 모두 소비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이윤과 투자는 같아야 한다.

케인스는 별도의 논거 없이 투자가 이윤을 창출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투자를 낳는가? 케인스는 개별 기업인의 주관적 결정이라 말한다.

무엇이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케인스는 [기업가의] “아성적 충동”이나 투자 보상에 대한 여러 기대 같은 것들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 생각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윤이 투자를 낳고, 자본에 의한 노동력 착취가 이윤의 원천이라고 본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개별 인간 행위를 정신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계급사회에 기반해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이윤이 투자를 낳기 때문에 이윤이 증가하지 않으면 투자는 증가할 수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투자는 이윤을 직접 만들지 않는 정부 지출을 제한하게 된다. 케인스주의 정책 결론과 반대로, 자본주의는 정부 지출이 아니라 정부 저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케인스주의자들은 이윤이 아니라 산출량을 위주로 본다. 그들은 경제에서 정부 지출의 모든 변화가 소비와 국가 경제에 산출량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삭감되면 국내총생산이 작아진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이른바 재정승수*다.

케인스주의의 세계적 권위자 폴 크루그먼은 블로그에 “유로존의 긴축 경험을 보면 아주 커다란 케인스주의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썼다. IMF도 그리스 정부가 지출을 삭감할수록(16퍼센트) 실질 국내총생산은 그보다 더 많이 하락(19퍼센트)했다며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케인스주의가 말하는 이 승수효과*에는 문제가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을 봐도 IMF의 주장은 잘못됐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IMF의 작업을 재현해 보[니] ... 대상 국가나 시기를 바꾸면 바로 [승수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그리스와 독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승수효과가 크다는] IMF 결론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뉴딜 정책이 1930년대 대불황에서 미국 경제를 구출했는가? 케인스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해 왔지만 뉴딜 정책은 1938년에 경제가 다시 급격한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사진은 뉴딜 정책의 상징인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현장.

“IMF는 자신의 결과가 대상 시기와 무관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간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 2010년 재정적자 규모 전망치는 2010년이나 2011년의 경제성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안 됐다.”

과거의 케인스주의 승수효과를 분석해 보면, 대상 시기에 따라 재정승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IMF도 “선진 경제에서 2009년까지 30년 동안 평균 재정승수가 0.5에 가깝다”고 인정했다. 정부지출과 세금의 변화가 30년 동안 경제 성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인과관계

케인스주의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 불황이 적자와 부채를 키워서 정부를 긴축으로 내모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긴축이 대공황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대공황이 긴축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와 반대로, 대규모 재정 적자와 높은 부채가 GDP 성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긴축주의자들의 연구도 엄청나게 많다. 공공부채 비율이 더 빠르게 줄어들수록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불황이 높은 부채를 유발하기 때문에 부채를 줄이는 유일한 길은 성장을 촉진하는 것뿐이라는 케인스주의자들의 설명이나, 높은 부채가 불황을 유발하기 때문에 성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부채를 줄이는 것뿐이라는 긴축주의자들의 설명은 모두 증거가 없다.

나는 1998년 이래 일본, 미국, 유로존의 GDP 대비 재정적자와 실질 GDP 성장을 비교해 봤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 1998년은 일본 관료들이 케인스주의적 정부 지출 정책과 단절했던 해

이다. 결과는 어땠는가?

1998~2007년, 일본의 실질 GDP 성장은 평균 1퍼센트인 반면, 평균 재정적자는 GDP의 6.9퍼센트였다. 같은 기간 미국 재정적자는 GDP의 2퍼센트로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되는 반면, 실질 GDP 성장은 연 3퍼센트로 일본보다 세 배 높았다. 유로존의 재정적자는 심지어 더 적은 GDP 대비 1.9퍼센트였다. 그러나 실질 GDP 성장은 여전히 연 평균 2.3퍼센트로 일본의 두 배 이상이었다. 2002~07년의 신용호황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미국이나 유로존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출했는데도 실질 GDP 성장은 가장 낮았다.

케인스주의는 지출(수요)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이윤에서 자본주의적 투자로, 투자에서 고용·임금·소비로 나아가며 경제를 분석한다. 소비와 GDP 성장이 투자 이윤율에 종속되지 그 반대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오늘날의 경제를 분석하는 것이 옳은지 확인하려면, 정부가 지출과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이윤율을 높이는지 낮추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 이윤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추가 정부 지출로 GDP가 잠깐 올라간다고 해도 더 긴 저성장과 불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부 지출을 늘려 주로 사회적 소득 배분과 복지에 투자하면, 자본가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율을 낮출 것이다.

정부가 교육과 의료 같은 공공 서비스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이윤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면, 그 계약을 얻는 자본 부분의 이윤율은 높아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비용을 이윤에 더 높은 세금을 매겨 조달한다면 전체적으로 이윤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심지어 노동자 임금에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다른 정부 지출을 삭감해 정부 재정을 마련한다 해도, 지출이 노동 대비 자본 비율이 낮은 부분으로 가는 경우에만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는 흔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이윤율이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지출 비용을 빌려온 돈으로 마련하면, 금리가 올라 이윤율 회복을 제

한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지출이 는다고 이윤율이 높아진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고, 그 반대가 더 사실에 가깝다.

마르크스주의적 예측

1997년 이후 대다수 선진 자본주의에서 이윤율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으로는 이윤율이 하락하면 투자 성장율이 떨어지고 GDP 성장도 느려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1998년부터 2001년의 가벼운 불황까지 4년 동안 미국의 실질 투자 성장률은 6.1퍼센트였는데 그 기간 미국 정부 재정은 흑자였고, 실질 GDP 성장은 한 해 3.6퍼센트였다.

그러나 2001년의 불황 이후 2002~07년 신용 호황 동안, 미국 실질 투자 성장률은 한 해에 2.2퍼센트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연평균 GDP 대비 3.6퍼센트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유지하며 돈을 풀었지만, 실질 GDP 성장은 연평균 2.6퍼센트까지 낮아졌다. 유럽도 같은 상황이었다.

경제의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본주의적 투자의 추이 변화는 더 흥미롭다. 1998~2001년 생산적 부문들에서 미국 실질 투자는 1년에 7.2퍼센트 올랐으나 2001~07년에는 그 전의 절반인 연평균 3.5퍼센트에 불과했다. 유럽도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장기적으로 투자나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는 것 같다. 반대 증거가 더 많다.

그렇다고 긴축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을 인용하면서 긴축이 옳다는 (연봉 47만 불에 세금도 내지 않는)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주장은 정말 헛소리다. 이 조그만 자본주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보다 사정이 약간 나을 뿐이다.

그것도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재정 이전을 받았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는 예산의 대략 20퍼센트를 유럽연합의 기금으로 충당한다. 은행이 긴급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고, 스웨덴과 다른 북유럽 은행들이 에스토니아 은행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정부 부채가 높았던 적도 없다.

재정 긴축 때문에 이들 경제가 호전된 것이 아니다. 노동권을 파괴했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이윤이 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주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유럽 지역으로 떠나서, 숙련 노동인구가 사라졌다. 1991년에 라트비아 인구는 2백70만 명이었는데, 최근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인구가 2백만 명으로 떨어졌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을 것이다.

영국 정부는 긴축에 매달리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긴축이 영국 경제 침체의 유일한거나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은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진정한 원인은 영국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실패다. 경제의 생산적인 부문들에서 생산성이 침체하고 투자는 붕괴했다. 자본 소유자들은 현금을 쌓아 놓고, 해외로 보내거나 금융 자산을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실물 경제는 침체하고, 민간 부문이 지배하기 때문에 관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의 생산적 부문인 제조업에서 이윤율이 1997년 이래 계속해서 하락했고 1990년대 초 이래로 보지 못한 저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불황에 대한 올바른 대안은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생산이 충분한 이윤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이 위기의 근원이라고 본다. 그래서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 낡거나 “죽은” 자본(고용인들, 오래된 기술, 수익성이 없는 약한 자본주의 기업들)을 충분히 파괴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자본주의가 악화할 것이다. 이런 장기 불황 속에서 또 다른 커다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케인스주의적 정부 지출은 노동계급의 고통을 일부 완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희생해야 가능한 것이다. 자본주의가 사회적 생산의 지배적인 형태인 한, 정부 지출 증가는 자본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연시킬 뿐이다.

장기 불황을 끝내고 커다란 침체를 피하고 싶다면,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끝내고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계획되는 사회적 생산으로 자본주의를 대체해야 한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3년 4월호 / 번역 유정

재정승수

정부가 돈을 1달러 지출했을 때 경제가 활성화되며 늘어나는 경제생산량을 정량화한 것.

승수효과

정부가 돈을 풀면 그것이 다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 애초 지출한 돈보다 더 많이 경기 부양 효과를 낸다는 주장.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9월 4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공무원노조

수당·임금 대폭 삭감에 맞서 투쟁을 건설하자!

박근혜 정부는 7월 29일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일직비·숙직비·출장비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각종 수당을 삭감하려 한다.

국정원 밋글로 대통령 자리를 도둑질 한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도둑질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고 비난하지만 실제 공무원 노동자들의 급여는 1백인 이상 민간 기업의 76.6퍼센트(2012년 민간 보수 수준 실태조사)에 지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못 미친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수당 삭감을 추진하면서 가증스럽게도 “복지 확대 등에 따른 세출 소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자들이 조세도피처에 숨겨 둔 900조 원이 넘는 돈은 그대로 두고, 대규모 부자 감세도 철회하지 않으면서, 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건드리는가. 무엇보다 복지 확대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서민운동회

반값등록금 핑계로 노동자 임금 삭감하려는 박근혜 8월 23일 국공립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

한편, 정부는 국공립대 교직원에 대한 공격도 시작했다. 당장 9월부터 일방적으로 기성회비 수당 지급이 폐지된다. 기성회비 수당 지급을 폐지하면 국공립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연평균 9백90만 원 삭감될 것이다.

정부는 “기성회비 수당 지급 폐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값등록금 실현의 열망을 이용해 공무원 노동자들과 학생,

학부모를 이간질하려는 술책이다. 설사 기성회비 수당을 폐지하더라도 반값등록금은커녕 학생 1인당 5만 원 정도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을 뿐이다.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려면, 기성회비 ‘수당’이 아니라 등록금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기성회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교육 재정은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해서가 아니라, 국가 지원을 확대해서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은 공기업은 물론이고, 사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정당화할 것이다. 이는 다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과 삭감을 강요하는 악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에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박탈하면 노조 설립신고를 해 줄 것처럼 해 놓고,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공무원 활동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투쟁력을 약화시킨 것도 하반기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사전 정치 작업이었던 듯하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인한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다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한 방 먹일 수 있을 것이다.

권정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복투 집행위원장

케이بل비정규직 티브로드 투쟁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책임져라”

8월 20일, 희망연대노조 케이بل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이하 ‘티브로드 지부’)가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티브로드지부는 올해 3월 27일 결성된 신생노조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에 맞서 첫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밖에 안 돼요. 시급 5천 원 받는 편의점 알바보다도 못하죠. 영업비등으로 겨우 월 2~3백만 원을 벌어요.”

“근속연수에 따른 수당 인상도 없어요. 이제 갓 입사한 사람이나, 십수 년이 넘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기본급을 받고 일해요.”

“일주일에 60시간 정도를 일해야 하고, 퇴근 후에도 고객이 부르면 언제, 어

디서나 즉각 달려가야 해요. 퇴근 후 동료들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동안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가 ‘클레임’이 들어와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케이بل 업계 1위인 티브로드는 한 해 1천7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노동자들의 낮은 처우와 고용불안을 나몰라라 해 왔다. 태광 티브로드 본사는 영업, 설치, A/S 같은 중요한 업무를 모두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내맡기고, 태광그룹 계열사 전산망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도 ‘바지사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겼다. 게다가 태광이 센터장까지도 직접 발탁해 임명해 왔다는 것이 폭로됐다. 명백한 불법도급이다.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사장 태광’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티브로드 이시우 지부장은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어느 해에는 개인 사업자가 되고, 수시로 사장이 바뀐다”라며 불법 파견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희망연대 이종탁 공동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처지는 이렇게 열악한데] 당기 순이익 1천7백억 원을 축벌들이 차지하는 게 경제민주화인가?”라며 분노했다.

티브로드지부는 현재 기본급 1백50만 원 일괄 적용, 상여금 4백 퍼센트 분할지급,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업체 사장들은 “조합원 명부를 보여 주면 교섭하겠다”며 교섭을 회피하고 “노조를 탈퇴 하면 수당을 올려주겠다”며 온갖 부당 노동행위도 저지르고 있다.

티브로드지부는 사측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9월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9월 7일 ‘희망지하철’을 통해 서울 전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리는 대규모 홍보전도 벌일 계획이다.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비정규직 투쟁 등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불법파견 반대 투쟁의 일부다.

진짜 사장

물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지난해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을 포함해 1만 3천여 명이 일하는 민간위탁 부문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서울시는 “2013년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서울시는 10월 민간위탁 제도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에 대해, ‘10월 용역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산콜센터 투쟁이 서울시와 상관없는 업체와 노조 사이의 문제라는듯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위탁 업체 3곳을 ‘풀 수 경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로 3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다산콜센터를 실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도 ‘진짜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8월 2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서울시와 민간위탁 업체들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백50여 명도 함께했다.

희망연대노조 윤진영 사무국장은 “직고용 요구는 단지 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요구다” 하며 이 투쟁의 의의를 밝혔다.

다산콜센터지부 김영아 지부장은 “우리는 전화 받는 ARS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던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마지막 조정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업체와 서울시, 둘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싸울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라며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소은화

전교조

지금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결정할 때다

7월 27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해고자에게 조합원 신분을 주지 않도록 규약을 개정하면 설립신고를 받아주겠다는 노동부의 말을 믿고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바꿨는데도 말이다. 노동부는 다시 ‘규약을 바뀌어도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노조 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을 트집잡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정부는 전교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약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적잖은 전교조 활동가들은 2월부터 정부의 이런 규약시정명령의 본질이 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조합 내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해 왔다. 따라서 규약을 고쳐 정부의 공격을 피하려는 시도는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분열만 낳을 것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사례는 이런 지적이 옳았음을 보여 줬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의심받는 위기에 처했다. 주류 언론들의 철저한 침묵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 촛불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힘으로 국정조사에 원세훈, 김용환을 그나마 세웠고, 박근혜는 불만을 잠재우려 전두환과 4대강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동시에 박근혜는 ‘공작정치 전문가’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며 민주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단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다. 철도·가스 민영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노동자 유리지갑 털기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함이다.

규약시정명령이 지금 떨어진 것도 아니고 법외노조화 시도가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거부 입장을 채택하는 것은 시기상조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해서 정부가 당분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박근혜는 우파를 결집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전교조 탄압을 시도할 수 있다. 일제고사 투쟁과 시국선언, 진보정당 후원 탄압은 이명박 정부가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전교조를 공격한 사례다.

게다가 정부가 규약시정명령이나 노조 결격사유명령을 내린 뒤에야 대처하려고 하면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기 어렵다.

단결력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도 규약시정명령 거부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은 정부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고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는 계기는 됐지만, 새누리당이 압도 다수인 국회에서 쟁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 전이라도 규약시정명령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노조 차원의 거부 입장을 정해둬야 한다.

거부 입장을 결정하면 노조가 분열한

다는 우려도 있는데, 노조 내 의견 차이를 숨긴다고 해서 노조의 단결력이 강화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부당한 규약시정명령의 본질을 폭로하며 조합원들과 함께 토론과 논쟁을 강화하며 투지를 모아갈 때 노조의 단결력도 강화될 수 있다.

이미 1천7백여 명이 정부의 규약개정 압박을 거부하는 현장조합원 선언에 동참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광범하게 의심받는 지금이 노조 차원의 규약시정명령 거부를 결정하기 좋을 때다.

개학 뒤 학교별 차등성과급 반납을 조직하는 한편, 촛불운동에도 적극 참가해 전교조 탄압의 본질을 폭로하며 연대를 호소하자.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박근혜 정부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다.

8월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 동지들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채택하고, 공무원노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 싸우자.

김연오 전교조 전국 대의원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9월 4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투쟁

“핸드폰만 고치냐. 우리 삶도 고쳐 보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알박한 회유와 악랄한 탄압에도 노조로 단결하고 있다. 7월 14일 노조 창립 이후 조합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 지금은 1천6백 명에 달한다.

삼성의 최첨단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조건에서 부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 왔다. 고장 난 부품을 수리하면서도 정작 자기 몸이 고장 나 아파도 쉬지도 못하며 주말, 휴일도 없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다. 노동자들은 “핸드폰, 냉장고만 고치냐. 우리 삶도 고쳐 보자!” 하고 외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위장도급·불법 파견 근절과 정규직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위장도급 증거가 끝도 없이 나오는데도, 자신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의 공문 접수조차 거부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들이 경총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바지사장이 아니”라며 쇼를 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신장섭 사무장은 “1백40개 협력업체 사장 중 3분의 2 이상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간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협력업체 사장과 관리직 인건비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지급한다고 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하면서 작은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조 가입률이 높은 일부 서비스센터에서는 출근시간이 아침 8시에서 9시로 늦춰졌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주말에 쉬 자유와 특근수당을 주장하자, 휴일 근무에 수당을 주기 시작했다. 전례 없는 일이다. 또, 조직이 잘된 27개 센터의 노조는 사측에 교섭을 요청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전국 1백40개 센터에서 서로 흩어져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해 삼성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은 큰 성과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단결해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8월 24일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리는 ‘삼성전자



김민수

삼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이다. 7월 14일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출범식.

서비스 투쟁 승리를 위한 급속노동자 결의대회’를 방해하는 것이다. 사측은 ‘강제근무명령서’를 발부하고 경고장을 남발하면서, 이날 저녁까지 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포항에서는 토요일 오후 1시에 퇴근했다고 징계위를 열었고, 노조가 생기면 센터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주 센터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 50명에게 내년 1월을 만기로 하는 기간제 계약서를 강요했다. 노조로 가입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업포다.

단결과 연대를 확대하자

이런 탄압에 위축되지 말고 굳건하게 싸워 나가야 한다.

이미 노조로 가입된 노동자들이 지역별 집회, 탄압에 항의하는 집회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망설이는 노동자들을 노조로 끌어들이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외근직 노동자들은 60퍼센트가 넘게 노조로 가입했지만, 내근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낮다.

차량유지비와 통신요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어 하루에 많은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내근직 노동자들의 수입이 외근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근직 노동자들도 건당 수수로 임금 체계 때문에 휴식도 식사시간도 없이 장시간 일해야 한다. 또, 삼성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협력업체에 고용돼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내근직 노동자들이 외근직 노동자들과 함께 단결해서 저항한다면 노동조건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

물론, 삼성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삼성 무노조 경영을 무너뜨린 것을 넘어 실질적 양보를 얻어 내려면 전국적 파업을 준비해 나갈 필요도 있다. 파업으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이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노동자들의 강력한 힘을 충분히 보여 줘야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재벌인 삼성에 맞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도 확대돼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삼성전자서비스공대위)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알리고 법률적 지원을 하는 등 의미 있는 구실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공대위는 진보정당들과 급진좌파 등 다양한 진보 단체들을 더 많이 포괄해서 연대를 더 깊고 넓게 건설해 나가야 한다.

강철구

김민수

독자토론광장

Letter@left21.com

9월 4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최후진술

“제 신념과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8월 23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회운동 활동가 김무석 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김무석 씨가 자신의 굳은 신념을 밝힌 최후 진술문을 본지에 보내 왔다.

저를 비롯해 지금까지 1만 7천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사회와 격리돼 감옥에서 수년씩 보내야만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물겠습니다. 정당하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더 우선한다고 판결해 왔는데, 이 판단의 정당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 중 다수가 징병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정당한 근거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 사회와 격리돼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억압 기구를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제가 거부하고자 하는 군대와, 제가 곧 갇히게 될 감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억압 기구들입니다.

군대가 얼마나 끔찍한 것들을 저질러왔습니까.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고, 베트남의 민중들을 짓밟았으며,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도왔고, 펭귄 대추리 주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군대가 태생적으로 권력자들의 억압 도구이기 때문에, 군내부에 민주주의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 끌려간 젊은이들은 생각을 멈출 것을 강요당하고, 오직 명령에 따라 것만을 요구받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평범한 민중의 자녀들이 다른 민중에게 총칼을 겨누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덕과 학력이 높은 사람의 자녀일수록 군대에 가는 비율은 줄어듭니다. 진정한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보다 신성한 것’이라면 권력자들부터 최전방에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양심을 팔아먹는 자들은 감옥에 가지 않는데, 양심을 지키려는 저는 감옥에 가야 합니까.

이런 끔찍한 억압 기구에 동원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대체복무제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시급히 도입돼야 하며, 징병제는 모병제로 전환돼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거짓된 명분일 뿐입니다. 북한의 GDP는 남한의 군사비 지출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한 것입니다. 북한 민중이 굶주리고 있는데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 정권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복지 공약은 후퇴시키면서 전투기를 구입하는 데 수조 원을 쓰는 남한 정부도 똑같은 이유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저는 감옥에 수감되고야 말 것이지만, 제 신념과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울림에 따른 제 실천입니다.

저 멀리 이집트에선 혁명가들이 군부의 반혁명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혁명의 전진을 위해 군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 그들의 무사와 승리를 기원하며 최후진술을 마지겠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http://workerssolidarity.org>)

울산 지회

협동조합운동은 사회 변화에서 어떤 구실을 하는가

연사 : 강동훈<레프트21> 기자

일시 : 8월 29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울산시민연대 교육관

참가비 : 3,000원 (학생 2,000원) / 문의 : 010-5004-1880

경기 지회

2차 혁명에 뒤이는 군부의 반혁명 ... 기로에 선 이집트, 어디로 가는가?

연사 : 김종환<레프트21> 국제 담당 기자

일시 : 8월 29일 (목) 7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경기본부 대회의실 (수원역 지하상가 1번출구 도보10분 매산동주민센터 옆 골든프라자5층)

참가비 : 2,000원 (학생 1,000원) / 문의 : 010-8700-4647

서울 동부지구

갈림길에 선 이집트 혁명 — 군부의 반동이나, 혁명의 전진이나?

연사 : 김종환<레프트21> 국제 담당 기자

일시 : 9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건대입구역 6번출구) 3층 2강의실

참가비 : 3,500원 (학생 2,500원) / 문의 : 010-9840-1236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주최하는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국유화, 사회화, 노동자통제, 노동자 경영참가 등 — 민영화의 대안은 무엇일까?

연사 : 최영준(민영화반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일시 : 9월 4일(수) 저녁 7시 30분

장소 : 고려대학교 (추후 공지)

참가비 : 2,000원 / 문의 : 010-5678-8630



박근혜의 정치 위기를 이용해 투쟁을 전진시키고 철도 민영화를 막아 내자

이정원

철도공사 '민영화 사장' 선임에 속도를 내던 박근혜 정부가 최근 사장 공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심각한 정치 위기에 몰린 박근혜의 일방통행식 '낙하산 인사'가 반발에 부딪혀 일단 지연된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철도공사 임원 추천위원들에게 외압을 가한 사실이 폭로되자, 항의가 급속히 확산됐다. 게다가 국토부는 4대강 사기극이 폭로되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해 이래저래 곤란한 처지였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는 광범한 철도 민영화 반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국정원 정국이라는 정치 위기 속에서 '민영화 사장' 낙하산까지 강행했다가 부패 정권에 대한 불만이 증폭될까 봐 우려했을 것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만 명이 모인 8월 17일 촛불 집회에선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해 달라'는 철도노조 위원장의 호소가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는 철도노조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을 벌여 온 성과다. 철도노조는 최근 국정원 촛불 집회에도 꾸준히 참가해 서명을 받고 시위 물품을 지원하며 투쟁을 연결시키려 노력해 왔다.

최근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당내 '공공 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철도 민영화 반대 여론이 확산된 결과다.

모든 야당들이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고 나선 것에 많은 사람들이 안도감을 느끼며 민영화 반대 운동의 저변이 더한층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민주당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철도 민영화 등 구조개편을 추진한 당사자였고, 지금도 철도 산업의 신자유주의적 개편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효율성 제고, 인력 구조조정 등은 필요하다고 본다.

▶ **민영화 서곡, 구조조정 저지해야**
또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는 일시적 지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 결정이 난 다음날,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는] 코레일 사장 선임과 관계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고, 기재부는 "정일영이 다시 후보로 나서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장 재공모를 언제 시행할지도 불분



우리 편이 파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7월 13일 철도-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

명하다. 벌써 '코레일 경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재공모가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추진될 것이다. 한 달가량이면 재공모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재공모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또 다른 민영화 추진 사장을 낙점할 것이 뻔하다. 게다가 이미 철도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 강화를 위한 공격은 철도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며, 민영화 추진 때 전 단계로 반드시 수반되는 과정이다. 1인 승무 확대, 강제 전보, 외주화 등은 분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역사 폐쇄도 적자노선 폐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철도노조의 지적처럼,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하나"다. 따라서 민영화 반대는 '전국민적' 투쟁이고 구조조정 반대는 '경제적' 투쟁이라며 분리해 대응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려면 각 직종별 대응에 머물지 않고 철도노조 전체가 함께 맞서 싸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야 각 직종 간의 자신감과 대응력의 불균등도 극복할 수 있다. KTX법대위 등의 연대도 중요하다.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며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조직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에도 더욱 힘있게 나설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지금 사장 공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해도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잠시 한 발 옆으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급세 전열을 재정비하고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밀어붙여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편도 기존의 투쟁 계획을 미루지 말고 계속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 **효과를 극대화하는 파업**

박근혜가 위기에 빠져 잠시 주춤할 때, 즉 박근혜가 피하고 싶을 때 투쟁하는 것이 우리 편에 유리하고 효과적이다.

파업 시기를 수서발KTX 법인 설립과 연동해 마냥 미루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박근혜의 정치 위기를 이용해 강력하게 투쟁을 벌여야 한다. 즉, 저들이

위기에 빠져 있고, 우리 편의 사기와 조직력이 좋고, 파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이런 때는 철도 이용이 가장 많은 추석 연휴 직전 시기일 것이다.

이 시기는 국정원 대선 개입에 항의하는 거리의 촛불운동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때이므로,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이 지지와 연대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촛불 시위에서 확인되는 '광장의 정서'를 보라.

파업 시기를 법인 설립과 연동한다면, 정부는 민영화를 착착 진행하면서 법인 설립 시점만 늦춰 노조의 대응에 김을 빼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아마 철도 노동자들은 이 기간 파업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비난도 신경이 쓰일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원인 제공자이므로, '공공성을 위한 정의로운 파업'이라는 대의를 확고히 내세우며 자신감 있게 대처해야 한다.

많은 철도 노동자들이 주장하듯, 파업의 방식도 중요하다.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면 파업을 벌여야 한다.

필수유지업무를 뛰어넘는 일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파업은 효과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탄압도 최소화할 수 있다.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단결이 중요한데,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바로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치는 악법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단결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추석 연휴 직전 전면 파업은 그 효과가 큰 만큼 정부와 언론의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노동자들이 대담하게 투쟁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여론의 지지를 모을 수 있다. 이것은 수많은 노동자 투쟁에서 입증된 바다.

최근 KTX법대위와 전국의 여러 지역 대책위들은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에 맞춰 적극적으로 연대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철도노조의 제안으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에서도 연대 투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철도 노동자들의 호소에 연대 파업으로 화답해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를 이용해 강력한 파업을 벌이고, 광범하고 실질적인 연대를 건설해 나간다면, 정부의 철도 민영화를 저지할 수 있다.

▶ **관련기사 11면**



'광장의 정서' 촛불집회에서 철도 민영화 파업 지지 호소는 엄청난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국회 특위 — 국회 밖의 세력관계가 더 중요하다

한편, 민주당 특위가 구성되고 9월 정기국회가 다가오자,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가 국민적 동의 없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집어 던지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불만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국회를 통해 철도 민영화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투쟁에 유리하게 작용하길 바라는 심정이다.

그런데 국회 특위는 국회 과반 의석인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만들기도, 효과를 내기도 쉽지 않다.

최근 진주의료원 국정조사특위가 이것을 잘 보여 준다. 이 특위는 '경상남도 한 달 이내 재개원 방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폐업 관련자를 고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이 보고서는 한 달이 지나도록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이 사이 홍준표는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 실질적인 세력관계는 국회 안이 아니라 밖에서 결정된다.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걸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파업과 광범한 연대 투쟁을 건설하는 데 확고한 중심을 뒀야 한다.

그래야 정치 쟁점화도 될 수 있고, 꿈쩍 않는 새누리당조차 이 쟁점을 계속 외면하면 내년 지자체 선거에도 이롭지 못할 것이라 여겨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일부가 기대하는 '민영화 추진 지연'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